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사

문학

Ⅰ. 워킹그룹 활동 개요
Ⅱ. 1차 연도 연구 결과 요약
Ⅲ. 2차 연도 연구 결과
Ⅳ. 종합 시사점 및 연구 함의



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 조강주 책임연구원
Tel | 061)900-2147
연구 기획·진행 | 문학 워킹그룹(정대훈, 조강주, 고영직, 김대현, 김서령, 오창은)
작성 |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ontents

Ⅰ. 워킹그룹 활동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 2
제2절 연구 체계 ····· 2
제3절 연구 일정 ····· 3
제4절 세미나 경과 ····· 4
제5절 연구 결과 개요 ····· 6

Ⅱ. 1차 연도 연구 결과 요약

제1절 조사 개요 (1차 연도) ····· 9
제2절 그룹별 핵심 이슈 (1차 연도) ····· 10
제3절 조사 결과 ····· 14

Ⅲ. 2차 연도 연구 결과

제1절 창작 전주기 지원체계의 구축 및 재설계 ····· 19
제2절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 및 문학 노동시장 확립 ····· 25
제3절 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 기반 재건과 균형발전 전략 ····· 33
제4절 독서·문해력 위기 대응을 위한 문학 소비 기반 전면 개편 ····· 40
제5절 문학작품의 매개/전달체계 혁신(플랫폼/미디어/콘텐츠 융합) ····· 46
제6절 비예술 · 예술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안전망 구축 ····· 52
제7절 문학 정책/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 ····· 57

Ⅳ. 종합 시사점 및 연구 함의

제1절 의제간 공통 문제의식 ····· 67
제2절 정책 방향의 시사점 ····· 69
제3절 의제별 정책 과제의 추진 경로 ····· 71
제4절 연구의 의의 ····· 72



01

워킹그룹
활동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 연구 목적 : 문학 생태계 중점 이슈를 정책과제로 환류하고, 세부 실행 과제 도출을 통한 국가 예술지원 체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개선 방안 도출

- 1년차 연구에서 도출한 중점 이슈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학 생태계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
- 생태계 구성원의 관점에서 기능별 가치사슬별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문이 구조적으로 취약한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
- 문학 생태계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지원 핵심가치와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 방향 재정립

* 연구 방법 : 주요 정책의제 설정,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정책의제별 정책과제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제2절 연구 체계

1. 연구 목적

* 1차 연도에서 도출된 문학 생태계 중점 이슈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전환하고, 국가 예술지원체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개선 방안 도출

* 문학 생태계 구성원의 관점에서 가치사슬·기능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구조적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AI 확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동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지원의 핵심 가치와 우선 순위 재정립

2. 연구 방법

* 2차 연도 연구는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집단 토론 및 의제별 정책 설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의제 초안 도출
- 워킹그룹 세미나를 통한 의제별 심층 토론 및 정책과제 구체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문학지원팀과의 성과 공유 및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 작업 후 최종 정책과제 확정

3. 워킹그룹 구성

* 워킹그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위원 2인과 문학 현장의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다.

[표 1-1] 워킹그룹 구성

구분	위원 명단	
내부 위원 (2인)	정대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담심의관
	조강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외부 위원 (4인)	고영직	문학평론가
	김대현	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정책위원장
	김서령	소설가
	오창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제3절 연구 일정

* 2차 연도 연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워킹그룹 구성 및 의제 설계, 1차 세미나, 성과 공유 내부 세미나, 2차 세미나의 순서로 주요 활동이 이루어졌다.

[표 1-2] 2차 연도 연구 추진 일정

시기	활동 구분	주요 내용
2025년 하반기	워킹그룹 구성 및 의제 설계	- 1차 연도 연구 결과 검토, 정책의제 초안 도출, 위원별 의제 분담
2026년 1월 8일 ~ 1월 9일	1차 세미나	- 의제별 자료 발표 및 상호 토론 (7개 의제, 2일간 진행)
2026년 1월 26일	성과 공유 내부 세미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문학지원팀 대상 중간 성과 공유 및 의견 수렴
2026년 3월 11일	2차 세미나	-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수정 자료 검토 및 최종 논의

제4절 세미나 경과

1. 1차 세미나 (2026년 1월 8일~9일)

* 1차 세미나는 워킹그룹이 각자 담당 의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참여 위원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7개 의제를 2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1-3] 1차 세미나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6년 1월 8일(목) ~ 9일(금)
형식	의제별 자료 발표 및 토론 (워킹그룹 6인)
주요 의제	[의제 1] 창작 전주기(전·중·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재설계 [의제 2]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 및 문학 노동시장 확립 [의제 3] 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 기반 재건과 균형발전 전략 [의제 4] 국소 문해력 위기 대응을 위한 문학 소비 기반 개편 [의제 5] 문학 작품의 매개·전달 체계 혁신 [의제 6] 비예술·예술 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 안전망 구축 [의제 7] 문학지원 거버넌스 구축

* 1차 세미나에서는 워킹그룹 위원들이 의제별로 담당 자료를 준비한 후 발표하고, 다른 위원들이 각자의 경험과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발표된 각 의제에 대해서는 사업 구상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현실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 주요 논의 결과, 의제별로 구체적인 수정·보완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일부 의제 간 내용 중복 가능성과 통합·재편의 필요성이 공유되었다. 특히 창작 전주기 지원과 문학 콘텐츠 확장(의제 1, 5), 작가 직업 생태계와 생계 안전망(의제 2, 6) 간의 관계 설정이 후속 논의 과제로 정리되었다.

2. 성과 공유 내부 세미나 (2026년 1월 26일)

* 성과 공유 내부 세미나는 1차 세미나까지의 연구 성과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문학지원팀에 공유하고 실무적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 1-4] 성과 공유 내부 세미나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참석자	워킹그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목적	7개 정책의제 및 29개 세부 추진과제 중간 성과 공유, 내부 실무 의견 수렴

* 세미나에서는 2차 연도 연구의 전체 구조와 7개 의제에 따른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각 과제에 대한 내부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발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위원이 진행하였으며, 각 의제의 배경, 추진 방향, 세부 사업안, 단계별 로드맵 등을 설명하였다.
* 내부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으로는 의제 간 중복 또는 경계 불분명 문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 일부 사업의 실행 가능성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수렴된 의견은 이후 워킹그룹 위원에게 전달되어 자료 수정·보완의 기초로 활용되었다.

3. 2차 세미나 (2026년 3월 11일)

* 2차 세미나는 성과 공유 내부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과 각 위원이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자료를 토대로, 의제별 최종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표 1-5] 2차 세미나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6년 3월 11일(수)
형식	수정 원고 검토 및 의제별 상호 의견 교환 (워킹그룹 중심)
주요 내용	- 각 위원 수정 원고 리뷰 및 최종 논의 - 의제별 세부 과제 조정 및 정리 - 향후 일정 및 발표 계획 등

* 2차 세미나에서는 각 위원이 수정한 원고를 검토하면서 의제 간 중복 과제 조정, 사업 구조의 단순화 및 명확화, 제도 도입 관련 현실적 허들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제 2(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학 커뮤니케이터와 문학 학예사를 통합하여 단일 자격 체계(1급 문학학예연구사, 2급 문학교육사, 3급 문학매개자)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토론의 중심이 되었다.

* 2차 세미나를 끝으로 워킹그룹의 현장 토론 과정은 마무리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행하였다.

제5절 연구 결과 개요

* 2차 연도 연구는 1차 연도에서 도출된 10개의 정책 문제를 토대로, 워킹그룹의 집단 토론을 거쳐 총 7개의 정책의제와 2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7개 의제는 창작 활동 지원, 직업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 소비 기반 확충, 매개 체계 혁신, 생계 안전망, 거버넌스의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문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각 의제의 세부 연구 결과는 제Ⅲ장에서 상술한다.

[표 1-6] 정책의제 및 세부 추진과제 개요

번호	정책의제	핵심 방향
의제 1	창작 전주기(전·중·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재설계	- 기획~창작~유통~확장의 전주기를 정책적 흐름으로 재구조화, 다년제·단계형 지원 체계 도입
의제 2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 및 문학 노동시장 확립	- 문학 전문 인력 자격 제도화, 공공 배치 구조 마련을 통한 문학 직업군 신설
의제 3	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 기반 재건과 균형발전 전략	- 지역 문학 인프라 복원, AI 대응 지원, 문해력 교육, 초광역 연계 등 다층적 전략 추진
의제 4	국소 문해력 위기 대응을 위한 문학 소비 기반 개편	- 세대별 맞춤형 독서·문해력 프로그램 개발, 문학을 통한 공공 독서 기반 재건
의제 5	문학 작품의 매개·전달 체계 혁신	- 문학 IP 확장, 공연·영상화 지원,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한 문학의 사회적 접점 확대
의제 6	비예술·예술 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 안전망 구축	- 공공·사회 영역과 작가 활동을 연계하여 창작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 마련
의제 7	문학지원 거버넌스 구축	- 분절적 지원 구조를 통합하는 중장기 거버넌스 체계 설계 및 협력 기반 마련

02

1차 연도
연구 결과 요약



제1절 조사 개요 (1차 연도)

1. 조사 목적 및 방법

* 1차 연도 연구는 문학 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FGI(초점집단면접) 및 IDI(심층개인면접) 형식의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의 예술위원회 역할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동안의 문학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4년 8월 20일(화) ~ 2025년 1월 20일(월)
-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행 :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 방법: FGI(초점집단면접) 및 IDI(심층개인면접), 총 56회 진행
- 조사 대상: 문학 생태계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97명

2. 조사 설계 및 그룹 구성

* 인터뷰는 문학 생태계의 가치사슬 단계(진입 → 창작 → 분배 → 소비 → 공공 및 민간 지원)를 반영하여 5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연구협의체가 각 그룹의 진행을 공동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표 2-1] 1차 연도 인터뷰 그룹 구성 및 주요 논의 내용

생태계 단계	그룹	대상	주요 논의 내용
Ⅰ. 진입	[그룹 1-1] 교육기관 관계자	예술고교 강사, 대학 교수, 민간 아카데미, 고교 국어교사 (7인)	- 문학 창작과 생계 / 문예창작과 교육 변화 - 문학 생태계와 지역성 / 문학과 독서 교육 - 문학의 대중화와 확장성 / 공공 지원 개선
	[그룹 1-2] 예비 창작자	예비 창작자 (3인)	- 문학 창작자의 진입 장벽과 교육 환경 - 등단 제도의 구조와 대안 모색 - 창작과 생계 병행 문제 / 청년 창작자의 지면 확보
Ⅱ. 창작	[그룹 2-1] 작가, 평론가 등	G1. 작가(수도권) 25인 G2. 작가(지역) 8인 G3. 아동문학가 5인 G4. 평론가 3인	- 문학 창작과 출판 환경 변화 / 생계 기반 문제 - 문학 생태계와 지속 가능성 / 지역 기반 창작 환경 - 아동문학 생태계의 불균형 구조 - 평론가 직업 안정성 및 평론 생태계 한계
	[그룹 2-2] 활동 조력자	출판 편집자, 번역가, 기획자, 기자 등 (12인)	- 문학 유통 구조와 독립 서점 위기 - 작가-독자 소통 채널 부족 / 문학 콘텐츠 확산 경로 단순화 - 문학 생태계 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Ⅲ. 분배	[그룹 3] 유통·홍보·마케팅 서비스 지원 주체	출판사 마케터, 서점 종사자, 도서관 사서, 온라인 유통·플랫폼 관계자 등 (16인)	- 문학 유통 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 단발성 홍보 관행 고착 / 마케팅 기획력 부재 - 플랫폼 중심 구조와 정보 비대칭 문제
Ⅳ. 소비	[그룹 4] 문학 독자	독서 동호회 참여자 (2인)	- 독서 플랫폼과 커뮤니티의 확장 / 세대별 독서 문화 - 문학 향유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 - 공공지원과 프로그램 설계
Ⅴ. 공공 및 민간 지원	[그룹 5] 예술위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지역 재단, 민간 재단, 문학관, 번역원 관계자 등 (12인)	- 기관 간 역할 혼재와 사업 중복·비효율 - 지원사업 성과 측정 및 환류 체계 미비 - 창작자 환경과 장르 불균형 / 통합 거버넌스 필요성

제2절 그룹별 핵심 이슈 (1차 연도)

1. [진입 단계]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등단 구조의 압박

가. 그룹 1-1 | 교육기관 관계자

* 문예창작과 교육 환경은 입시 방식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교육 과정은 여전히 전통적인 등단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겸업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웹소설·시나리오·콘텐츠 기획 등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 교육은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학 독서 교육 역시 입시·수행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문학을 자율적으로 향유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적되었다.

> "전업 작가로 사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출판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강의도 하고, 원고 청탁이나 대필도 하고, 여기저기 글 쓰는 일도 해야 해요. [...] 예전에는 그래도 한 권 출판하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글을 쓰면서도 계속 다른 일들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LA002)
>
> "학교에서 문학을 배우는 방식이 결국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문학 작품을 읽고 자유롭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문학을 분석해야 하는 과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LA005)
>
> "문창과 학생들이 졸업하면 꼭 창작을 하지 않고 출판 편집자, 번역가, 콘텐츠 기획자로도 많이 가요. [...]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창작 중심 교육이 많아서,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가 부족한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LA004)

나. 그룹 1-2 | 예비 창작자

* 지방 거주 청년 창작자들은 수도권 집중의 창작 교육 인프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 기회 자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신춘문예·문예지 중심의 등단 구조는 높은 경쟁률과 심사 경향에 맞춰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며, 창작 자체보다 '등단'이 목표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지방에서는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어요. 저도 문학을 배우고 싶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진행되더라고요. 결국 서울로 가야 하는데, 교통비랑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LA008)
>
>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신문사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심사위원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도 다르니까, 결국 제 글을 거기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 그러다 보니까 등단 자체가 목표가 되고, 정작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LA008)

2, [창작 단계] 생계 불안, 불공정 계약, 생태계 불균형

가. 그룹 2-1, G1 | 작가 (수도권)

* 수도권 작가들은 전업 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강의·강연·대필 등 다중 겸업이 일상화된 현실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다. 출판 계약 과정에서 불투명한 인세 지급 구조와 완성 원고 선제출 관행이 고착화되어, 특히 신진 작가에게 구조적인 불이익이 집중되고 있었다. 공공 지원사업의 경우 접근 기준이 불명확하고, 성과 중심의 단기 지원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창작 지속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려면 글쓰기 강의나 강연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업이 창작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LA034)
>
> "작가가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지원 사업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업 작가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LA011)
>
> "출판사마다 인세 지급 방식이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보통 정가의 10%를 작가에게 지급하지만, 출판사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선인세를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LA019)

나. 그룹 2-1, G2 | 작가 (지역)

*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창작 인프라 단절, 인적 네트워크 부재, 공모·지원사업 정보 접근 제한이라는 삼중의 고립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평가·출판 구조에서 지역 작가의 작품이 가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 "여기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LA043)
>
> "이주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지역에 어떤 문학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공모 정보 같은 것도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작가로 활동을 이어가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한데, 그게 지역엔 진짜 없더라고요." (LA042)

다. 그룹 2-1, G3 | 아동문학가

* 아동문학 분야는 문학상 수상 구조의 폐쇄성과 문단 중심 시스템의 고착화로 인해 신진 창작자의 진입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특정 인맥·평론가 집단·출판 네트워크와 연계된 평가 구조 내에서, 지역 기반 작가와 제도권 밖 창작자는 공정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문학상이라는 게 결국은 평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미 정해진 사람들 안에서만 반복되면 나 같은 사람은 애초에 도전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LA047)
>
> "지역에서 활동하면 더 멀게 느껴지죠. 누구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발표할 곳도 한정적이고. 결국 혼자 쓰고 혼자 접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LA044)

라. 그룹 2-1, G4 | 평론가

* 문학평론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비정규직 강의에 의존하면서 평론 활동을 이어가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었다. 발간 지원에는 공공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간 이후의 비평·담론 형성에 대한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어서, '창작 이후 단계에 대한 사후 지원의 절실함'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비평 활동 한국 문학에서의 한국 문학평론가로서 이걸로만은 지속 가능한 어떤 생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 결국 문학 연구를 지속하면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LA049)
>
> "창작자를 지원하고 너 열심히 써, 자료 조사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게, 책 내면 돈 줄게...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책을 내고 나서, 그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대한 사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껴요." (LA049)

마. 그룹 2-2 | 활동 조력자 (출판 편집자·번역가·기획자 등)

* 출판 편집자·번역가·기획자 등 문학 생태계의 중간 조력자 그룹에서는, 작가-독자 간 소통 채널의 구조적 부재와 문학 유통의 이중 위기(대형 온라인 서점 과점 + 독립 서점 생존 위기)가 핵심 이슈로 제기되었다. 디지털 소통 역량이 작가 개인에게 집중 전가되는 구조, 텍스트 중심을 벗어난 다층적 콘텐츠 확산 전략의 부재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 "SNS에서 모든 게 일어나요. [...] 결국 디지털 소통 능력은 작가 개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LA059)
>
> "독립 서점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 중심지로 기능했었으나, 유통 마진과 물류 시스템에서 불리한 구조로 인해 운영 지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LA061)
>
> "소통이라고 하면 다 SNS 얘기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 작가들도 많거든요. 결국 그런 분들은 독자한테 닿을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LA053)

3. [분배 단계] 단발성 홍보 관행과 작가 소외 구조

* 유통·홍보·마케팅 주체들은 출간 직후 이벤트성 홍보에만 집중하는 단발성 관행이 고착되어 있고,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이나 콘텐츠 라인업 기획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형 온라인 서점 중심의 유통 고착화로 인해 독립출판물과 신진 작가의 작품이 노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유통 과정 전반에서 작가의 주체성과 협상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 "출간되면 보도자료 한두 개 뿌리고, 북토크 한 번 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콘텐츠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알릴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책의 수명이 짧고, 독자에게 각인되지도 않아요." (LA066)
>
> "출판사 내부에서도 홍보는 이벤트성으로 소비돼요. 뭘 알리겠다는 전략 없이 그냥 시기가 되니까 뭔가를 하자는 식이죠. 타깃이 누구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거의 없어요." (LA074)

4. [소비 단계] 독서 커뮤니티의 사교화와 독립출판물의 가시성 문제

* 독자 그룹 면접에서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면서 독서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경향이 언급되었다. 또한 대형 출판사 중심의 도서 유통 구조에서 독립출판물이나 소규모 출판사의 작품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닿기 어렵고, 이는 독자의 독서 선택지를 단일화하여 문학적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책을 진짜 열심히 읽고 간 날에도 정작 그 책 얘기를 거의 안 해서 허탈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굳이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결국 나가게 됐죠." (LA080)
>
> "같이 있는 분들 중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들 만나려고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책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였는데, 그런 분위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낮아졌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겼어요." (LA081)

5. [공공 및 민간 지원 단계] 지원사업 분절과 거버넌스 부재

* 공공 및 민간 지원 담당자들은 유사한 목적의 지원사업이 복수의 기관에서 분절 운영되어, 창작자의 혼란과 행정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 문제로 꼽았다.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가 발간 건수 등 정량 지표 중심에 머물러 있어, 창작의 질적 성장이나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정성적 효과가 측정·환류되지 않는 구조도 지적되었다.

> "국제 교류든 번역 지원이든 각 기관이 비슷한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하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LA092)
>
> "지원받으려면 여러 기관을 각각 알아봐야 하고, 심사 기준이나 신청 양식도 다 달라요. 결과적으로 행정 부담이 크고, 작가나 출판사가 사업 하나 신청하는 데도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구조예요." (LA088)
>
> "책이 한 권 나오느냐보다, 그 작업이 작가에게 어떤 변화나 다음 기회를 만들어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거나 공유하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LA087)
>
> "정책이 유연해지려면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지금은 행정이 앞서고 창작은 그 뒤를 따르는 구조인데, 이걸 창작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LA084)

제3절 조사 결과

1. 10개 핵심 정책문제 도출

* 5개 그룹의 인터뷰 결과를 가치사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문학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10개의 핵심 정책문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특정 단계의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창작 진입 → 창작 활동 → 분배 → 소비 → 지원 구조의 전 영역에서 상호 연결된 문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표 2-2]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10개 핵심 정책문제

번호	정책문제 영역	핵심 내용
①	창작 지원의 단계 편중	- 기존 지원이 발간 단계에만 집중되어 기획·초고·유통·확장 단계는 정책적 공백 상태
②	문학 창작의 직업적 불안정성	- 전업 창작만으로 생계 유지 불가, 다중 겸업 불가피 : 창작 지속 가능성 위협
③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	- 창작 교육·출판·문단 네트워크·지원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 : 지역 작가의 구조적 소외
④	문해력 위기와 독서 기반 약화	- 입시 중심 문학 교육, 숏폼 콘텐츠 확산에 따른 독서 인구 감소와 문해력 저하
⑤	문학의 사회적 매개 기능 약화	- 문학 작품이 발간 이후 사회와 만나는 경로(공연·영상·교육·지역 등)가 극히 제한적
⑥	출판·유통 구조의 단기화·편중화	- 대형 온라인 서점 과점, 단발성 홍보 관행, 독립 서점 생존 위기로 유통 다양성 약화
⑦	중간 매개 주체의 지원 사각지대	- 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 등 생태계 실질 구성 주체가 공공 지원에서 배제
⑧	작가 생계 안전망의 부재	- 중견·중장년 작가의 생계 기반 상실로 인한 이탈, 창작 지속을 위한 부업·병행 구조 제도화 부재
⑨	지원사업의 분절과 중복	- 복수 기관의 유사 사업 분산 운영, 창작자 행정 부담 가중, 통합 거버넌스 부재
⑩	지원 성과의 환류 체계 미비	- 정량 지표 중심 성과 평가, 창작의 질적 성장이나 생태계 기여를 측정·환류하는 구조 부재

2. 2차 연도 연구과제 도출

가. 정책문제에서 정책의제로

* 1차 연도에서 도출된 10개의 핵심 정책문제는 단독으로 해결 가능한 개별 사안이 아니라, 생태계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복합적·연동적 문제 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차 연도에서는 개별 문제에 대한 단편 해법이 아닌, 문학 생태계 지원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정책의제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정책의제 도출 과정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다.

- 현장 인식의 공통성: 복수의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우선 의제로 설정
- 구조적 개입 가능성: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가 아니라 제도·정책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문제
- 공공 지원의 역할 명확성: 민간 시장의 자정 기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영역

나. 10개 정책문제에서 7개 정책의제로의 재구조화

* 워킹그룹은 10개 정책문제를 분석하면서, 개별 문제들 사이의 연결 관계와 상위 과제를 파악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문제들이 크게 ①창작 과정의 구조적 재설계 필요성, ②문학 직업 생태계의 제도화 필요성, ③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 재건 필요성, ④문학 소비 및 독서 기반 재건 필요성, ⑤문학 매개·전달 경로의 혁신 필요성, ⑥작가 생계 안전망의 제도화 필요성, ⑦지원 거버넌스 통합 필요성이라는 7개의 의제 방향으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제가 '지원사업 설계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문학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역할 연계와 협력 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개별 사업이 아닌 생태계 단위의 정책 설계를 2차 연도 연구의 핵심 지향으로 설정하였다.

다. 7번째 의제의 추가 배경

* 주목할 점은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거버넌스' 의제가 2차 연도 워킹그룹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워킹그룹 위원들은 나머지 6개 의제의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문학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 즉, 의제 7(문학지원 거버넌스 구축)은 여타 의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 조건으로, 생태계 연구의 '메타 의제'로서 2차 연도 연구의 최종 의제로 확정되었다.

[표 2-3] 10개 정책문제와 7개 정책의제의 대응 관계

1차 연도 핵심 정책문제	2차 연도 정책의제
① 창작 지원의 단계 편중	의제 1: 창작 전주기(전·중·후) 지원체계 구축 및 재설계
⑦ 중간 매개 주체의 지원 사각지대	
② 문학 창작의 직업적 불안정성	의제 2: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 및 문학 노동시장 확립
③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	의제 3: 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 기반 재건과 균형발전 전략
④ 문해력 위기와 독서 기반 약화	의제 4: 국소 문해력 위기 대응을 위한 문학 소비 기반 개편
⑤ 문학의 사회적 매개 기능 약화	의제 5: 문학 작품의 매개·전달 체계 혁신
⑥ 출판·유통 구조의 단기화·편중화	
⑧ 작가 생계 안전망의 부재	의제 6: 비예술·예술 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 안전망 구축
⑨ 지원사업의 분절과 중복	의제 7: 문학지원 거버넌스 구축 (신규 추가)
⑩ 지원 성과의 환류 체계 미비 (워킹그룹 논의에서 추가)	

* 이와 같이 2차 연도 연구는 1차 연도의 현장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하 제Ⅲ장에서는 7개 의제별 세부 연구 결과를 상술한다.

03

2차 연도
연구 결과



제1절 창작 전주기 지원체계의 구축 및 재설계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발간 단계에 편중된 지원 구조의 한계

* 한국의 문학 지원 정책은 오랫동안 '발간'이라는 단일 성과 단계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왔다. 창작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고 완성 및 출판을 전제로 지급되었고, 지원 기간은 단년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문학 창작의 실질적인 흐름(기획을 구상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초고를 수없이 다듬는 과정)은 정책의 시야 밖에 놓였고, 발간 이후의 유통·홍보·독자 확산 단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 워킹그룹은 1차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진단하였다. 창작 지원이 단편적으로 발간 단계에만 붙어 있다 보니, 기획과 창작 이전 단계, 발간 이후의 유통·마케팅·확장 단계 모두가 구조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가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자료조사·초고 작업이라는 창작의 전 단계는 작가 개인의 무급 노동으로 감당해야 했으며, 발간 이후에는 유통·마케팅·독자 소통·프로그램 기획·행사 운영·결과 보고까지 작가에게 과도하게 요구되는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의제1] 창작 전주기(전·중·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재설계 : 발제

> 창작 지원이 단편적으로 발간지원 단에만 붙어있는 것을 좀 더 확장해 보고, 기획, 창작, 발표, 유통, 확장, 환류가 단계별로 비어 있는 곳들을 채울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설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작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는 측면이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1차 세미나)

나. 중간 매개 주체의 제도적 배제

* 문학 생태계는 작가 혼자서 구성되지 않는다. 출판사, 기획사, 문학 에이전시, 콘텐츠 제작 주체 등 다양한 중간 매개 주체들이 문학 작품이 기획되어 독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부수적 주체로만 취급해 왔다.

* 워킹그룹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원 범위의 협소함으로 보지 않았다. 1차 연도 인터뷰에서 출판사·에이전시 관계자들은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공공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토로하였다. 특히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애쓰는 에이전시들조차 문학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대중서나 다른 장르 저작물을 병행 취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 워킹그룹은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작가 개인 지원에서 벗어나 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 등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전주기 지원 체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다. 공공지원 종료 이후 자생 기반 부재의 악순환

* 단년도 성과 중심 지원의 한계는 공공지원 종료 이후의 국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원이 끊기는 순간 창작자와 관련 주체들은 스스로 유통·홍보·확산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역량이나 네트워크가 지원 기간 중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대부분 소기의 성과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 1차 세미나에서 워킹그룹 위원들은 이를 자생 기반이 형성될 시간과 구조가 없는 지원의 문제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문학 창작을 단일 성과물을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획에서 창작·발표·유통·확장·환류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재인식하고, 이 흐름 전체를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창작 전주기 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정책적 지향과 전주기 개념

가. 전주기 접근의 의미와 범위

* 의제 1에서 설정한 전주기(全週期)는 기획 → 창작 → 발표 → 유통 → 확장(IP) → 환류의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묶는 개념이다. 워킹그룹은 이 개념이 생애주기나 생계주기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창작 과정은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비선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했던 기획 이전 단계와 발간 이후 단계의 정책적 공백을 가시화하는 데 유효한 개념 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전주기 접근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각 단계에서 다른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단계와 단계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지원 종료 이후에도 창작과 유통이 자생적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문학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나. 지원 대상과 성과 기준의 전환

* 이 의제의 핵심 방향 전환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 지원이 작가 개인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전주기 접근에서는 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콘텐츠 제작 주체 등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조 전환이 요청된다. 이때 문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 콘텐츠 산업과의 경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설계 전반을 관통하는 과제로 제기되었다.

* 성과의 기준도 단일 발간 여부에서 창작의 지속성·독자 도달·유통 확장·산업 연계 가능성 등으로 다양화한다. 더불어 단년도 성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제·단계형 지원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단기 성과를 강요하는 지원 방식은 실험적 창작이나 장기적 기획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기 때문이다.

[표 3-1] 기존 지원 체계와 전주기 지원 체계 비교

구분	기존 지원 체계	전주기 지원 체계 (지향)
지원 범위	발간(출판) 단계 중심	기획→창작→발표→유통→확장→환류 전 단계
지원 기간	단년도 단위	다년제·단계형 (최대 5년)
지원 대상	작가 개인 중심	작가 + 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 등 생태계 전 주체
성과 기준	단일 발간 성과	창작 지속성·독자 도달·유통 확장·산업 연계 가능성
핵심 원칙	결과물 중심 지원	지속 가능한 과정 지원 + 문학 고유성 확보

3. 주요 추진 방향

* 의제 1에서는 전주기 지원 체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네 가지 방향의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위원이 초안을 제시하고, 워킹그룹 전체 토론을 통해 방향과 쟁점이 정제되었다.

가. 연계형 다년제 창작·유통 지원 : 생태계 전 주체를 묶는 구조

* 첫 번째 방향은 기존의 단년도·발간 중심 지원 구조를 넘어, 창작의 전 단계를 하나의 지원 단위로 묶는 복합·연계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작가 개인만이 아니라 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기획부터 발간·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상정한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단계별 선별 방식(기획 단계에서 넓게 선발한 뒤 원고 완성도를 보고 단계적으로 압축하며 최종적으로 유통·콘텐츠 확장까지 연결하는 구조)이 전주기 개념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 지원 주체와 성과 기준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으로, 기획 전 단계에서의 발간을 전제하지 않는 지원과, 기존 문학 작품의 IP 확장 지원은 목적과 설계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토론 과정에서는 이 방향에 대한 전반적 공감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쟁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출판사·에이전시가 주도할 경우 상업성 편향과 작가의 주변화 가능성, 기존 발간 지원·펠로우십과의 관계 정립, 다년제 구조에서 신진·실험 작가 진입의 어려움,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타 기관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핵심 논의 사항으로 꼽혔다.

나. 자기 설계형 문학 활동 실험 지원 : 틀이 아닌 작가 중심의 지원

* 두 번째 방향은 기존 지원 구조의 역방향, 즉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작가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작가가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 1차 연도 인터뷰에서 여러 작가들이 공공지원 사업은 정해진 틀이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직접적 응답으로 제안된 방향이다. 발간 여부와 무관하게 탐색, 리서치, 경험 축적, 장르 간 실험, 취재 여행 등 창작의 전 단계에서 작가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워킹그룹에서는 스페인 수방을 통해 현지 작가를 만나고 글을 쓰고자 했던 작가가 그 여정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사례, 시인이 스포츠나 의학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전혀 다른 방식의 창작을 시도하고 싶었던 경우 등이 이 방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로 공유되었다.

* 연령·경력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액·정액 지원에 가까운 방식과 과정 기록 중심의 평가를 채택하여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워킹그룹에서는 문체부 인문 실험 사업의 무정산 방식이 가장 창의적인 결과물을 낳고 있다는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소액을 넓게 지원하여 다양한 시도를 포착하는 것이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다. 문학 작품의 장르 간 확장 및 콘텐츠화 지원

* 세 번째 방향은 발간된 문학 작품이 사회와 만나는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공연, 낭독극, 영상, 장르 간 협업 등을 통해 문학 작품의 사회적 확산 경로를 공공이 지원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워킹그룹에서는 연극계가 좋은 대본 부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반면 문학에는 무대화·영상화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 양측에 모두 유익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공연·영상화 제작비 지원 트랙 신설, 작가와 연출·감독 등 타 장르 예술가 간 협업 지원, 문학 IP 피칭 자료 제작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순수문학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상 작품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상업성 높은 장르물이 사업을 잠식하지 않도록 블로킹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정리되었다.

* 워킹그룹에서는 이 방향과 의제 5(문학 매개·전달 체계 혁신)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두 의제 간 역할 분담과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로 남았으며, 이 방향에서 다루는 것은 창작 과정과 연결된 1차 확장 지원으로, 이미 완성된 작품의 유통·전달 체계는 의제 5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작가 생계 안전망 연계 방향은 의제 6으로 분리

* 의제 1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비예술·예술 결합형 작가 생계 안전망 구상은, 성격상 창작 전주기 지원과 목표가 다르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의제(의제 6)로 분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구상은 중견·중장년 작가의 이탈 원인이 창작 역량의 소진이 아니라 생계 기반 상실에 있다는 현장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공공 영역의 재난 기록·의료복지·도시재생 등의 업무와 작가 활동을 연계하여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세월호 기록 작업이 좋은 모델 사례로 공유되었다.

* 성격상 순수 창작 지원보다는 생계·복지 정책에 가까운 만큼, 별도 의제로 다루는 것이 정책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4.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1차 세미나 전체 토론 및 이후 성과 공유 세미나와 2차 세미나를 거치면서, 의제 1은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구체적 설계에 대한 다층적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난 의제이기도 하였다.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발간 지원 및 펠로우십과의 관계 설정: 예술위원회의 발간 지원 사업이 펠로우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기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해도, 기존 발간 지원과 신규 전주기 지원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문학 고유성과 상업화 사이의 균형: 출판사·에이전시·콘텐츠 제작사가 지원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상업성 높은 작품이나 웹소설·장르 소설 중심으로 사업이 쏠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생태계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 설계 과제로 남았다.
- 신진·실험 작가 진입 보장: 다년제·성과 중심 구조가 검증된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경우, 신진 작가나 실험적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소액·다건 지원 구조를 병행하거나 별도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트랙 구조의 단순화: 초안에서 제시된 4개 트랙(확장·고도화 / 성장·도약 / 인큐베이팅·창업 / 소기업·프로젝트형)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단계별 지원이라는 전주기 컨셉에 더 잘 맞는 단순화된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공유되었다.

5.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1의 논의는 문학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창작을 단일 성과물의 생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지속적 흐름으로서의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는 관점으로의 전환, 그리고 작가 개인 중심 지원에서 생태계 전 주체를 포괄하는 구조로의 이행이 핵심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 이 의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의 전 과정이 정책 시야 안에 들어옴으로써 기획 단계와 발간 이후 단계의 공백이 해소된다. 둘째, 문학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가 공공 지원의 수혜자로 포함되어, 각 주체의 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 구조가 형성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창작 흐름과 자생 기반 형성 가능성이 확대된다. 넷째, 문학 작품의 사회적 도달 경로가 다양화되어 독자 접점이 넓어진다.

[표 3-2] 의제 1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발간 단계에 편중된 단년도 지원 → 기획 전·발간 후 단계의 구조적 공백 - 작가 개인에게 창작 외 역할 과잉 전가 - 중간 매개 주체(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의 정책 사각지대 - 공공지원 종료 후 자생 기반 미형성 → 지속 가능성 약화
정책 방향	- 기획→창작→발표→유통→확장→환류의 전주기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재구조화 - 지원 대상을 작가 개인에서 생태계 전 주체로 확대 - 단년도 성과 중심에서 다년제·단계형·과정 중심 지원으로 전환 - 문학 고유성 확보와 콘텐츠 산업 경계 유지
주요 추진 방향	① 연계형 다년제 창작·유통 지원 체계 구축 (트랙별 규모화) ② 자기 설계형 문학 활동 실험 지원 (소액·무정산 방식) ③ 문학 작품의 장르 간 확장 및 콘텐츠화 지원 ④ 작가 생계 안전망 연계는 의제 6으로 분리
주요 쟁점	- 기존 발간 지원·펠로우십과의 역할 분담 정립 필요 - 상업성 편향·웹소설 등 장르물 잠식 방지 장치 마련 - 신진·실험 작가 진입 보장을 위한 소액·다건 트랙 병행 - 트랙 구조 단순화 및 정책 메시지 명확화 - 의제 5(매개·전달 체계)와의 경계 설정
기대 효과	- 창작 전 과정의 정책 가시화로 공백 구간 해소 - 생태계 전 주체의 공공 지원 포함으로 상호 협력 구조 형성 - 공공지원 종료 이후 자생 기반 형성 가능성 확대 - 문학 작품의 사회적 도달 경로 다양화 및 독자 접점 확장

* 의제 1은 단독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의제이기도 하다. 이 방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제 2(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에서 다루는 전문 인력 양성, 의제 5(매개·전달 체계 혁신)에서의 유통 구조 개선, 의제 7(거버넌스 구축)에서의 통합 정책 조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결 관계는 2차 연도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인식이기도 하다.

제2절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 및 문학 노동시장 확립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문학은 직업이 될 수 없는가 : 구조적 현실 진단

* 문학 창작을 직업으로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1차 연도 인터뷰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화두였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32.5%로 가장 높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도 11%에 달한다. 전업 작가 비율은 40.2%이지만, 이 중 81%가 창작 활동 이외에 별도의 경제적 부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업 작가조차 실질적으로는 겸업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 발제를 맡은 위원은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학 창작 자체에 직업성을 강제로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서 출발하였다. 그 대신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는 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직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 즉, 창작 활동 밖에서 문학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직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창작을 주업으로 유지하면서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정적 서브잡(sub-job)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의제2]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 및 문학 노동시장 확립 : 발제

> 2023년 작가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32.5%, 소득 없음 11%. 전업 작가로 분류된 이들 중 81%가 창작 외 별도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지적·언어적 전문성을 가진 문학 인력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이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차원의 인력 활용 구조가 미비한 데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세미나)

나. 문학 직업 생태계의 다층적 공백

* 문학 생태계에는 창작자(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전문 직군의 층위가 매우 취약하다. 1차 연도 인터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출판 편집자는 40대 이후 출판사를 떠나거나 독립 출판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문학 에이전시 인력은 경력직 중심으로 소수만 활동하며, 신진 에이전트 양성 구조가 거의 전무하다. 문학관에는 문학 전공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행 학예사 제도가 박물관·미술관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학 전공자가 제도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 문학 생태계 내 직업군을 세 층위로 구분하여 문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창작자(작가) 층위에서 부업·서브잡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출판 편집자·번역가·기획자·에이전트 등 전문직 층위에서 경력 단절과 진입 경로 부재 문제가 있다. 셋째, 문학 커뮤니케이터·문학 학예사 등 새로운 매개 전문직 층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층위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의제 2의 과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정책 실패

* 워킹그룹은 이 문제를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실패로 진단하였다. 문예창작과·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도 문학과 관련된 직업 경로가 사실상 등단(작가)이라는 단일한 통로 외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 등단에 실패하면 문학의 외부로 완전히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문학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인력이 문학 생태계 안에 남아 기여할 경로가 없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진다.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에도 문학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도에도 문학 전공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공공도서관에서 문학 큐레이션 기능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학을 향유하려는 시민의 수요는 점증하고 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매칭 구조 자체가 설계되지 않은 상태라는 진단으로 이어졌다.

2. 정책적 지향

* 의제 2는 문학 창작자를 정책의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학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사회 곳곳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 직군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핵심 지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

- 전문 직군 신설: 문학적 전문성을 독자적인 직업 정체성으로 제도화하는 방향. 자격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 배치 구조를 마련하여, 문학 전공자가 문학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로를 여는 것.
- 서브잡 구조 제도화: 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부업 구조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방향. 작가가 문학 활동의 연장선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모델을 설계하는 것.

* 이 두 방향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전문 직군 신설은 문학 전공자 전반의 직업 경로를 넓히는 구조 설계이며, 서브잡 구조 제도화는 기존 작가들의 창작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생계 보완 장치다.

3. 주요 추진 방향

* 의제 2에서는 네 가지 세부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중 앞의 두 방향은 전문 직군 신설 트랙에, 뒤의 두 방향은 서브잡 구조 제도화 트랙에 해당한다.

가. 문학 커뮤니케이터 전문 자격 신설 및 공공 배치

* 첫 번째 방향은 문학 전문 지식을 일반 시민에게 매개하는 전문 직군으로 '문학 커뮤니케이터'를 신설하고, 이를 국가 인증 자격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경제 커뮤니케이터 등 타 전문 분야에서 이미 활성화된 사례와 같이,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삶과 연결하며 독서 공동체를 설계하는 공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 이 방향의 배경에는 시민 독서 행태 조사 결과가 있다. 정규 교육 외 문학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이 30%가 채 되지 않으며, 문학을 읽지 않는 주된 이유로 흥미 부족·시간 부족·자신에게 맞는 책 선택의 어려움이 꼽힌다. 문학 접근 과정에서 중간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도서·문학 전문 교육자 과정, 프랑스의 도서 매개자 양성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 유럽의 문학 강국들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다.

▶ 해외 사례 참고 ① : 도서 및 문학전문 교육자(Literaturpadagogik) – 독일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를 증진하고 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직업 교육 과정

1. 교육 과정 개요
- 독일에서 '문학 교육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나, 연방 아동 및 청소년 문학 협회(BVL)에서 인증하는 민간 자격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함.
- 정식 명칭: 독서 및 문학 교육 전문가 (Fachkraft fur Lese- und Literaturpadagogik)
- 주관 기관: BVL (Bundesverband Leseforderung e.V.)
- 교육 목적: 독서 동기 부여, 창의적 글쓰기, 매체 활용 능력 전파

2. 교육 과정 구성 (BVL 인증 기준)
- BVL의 표준 커리큘럼은 일정 이수 시간(600시간)을 요구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구조임

구분	주요 내용
핵심 모듈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이론, 발달 심리학, 독서 사회학
실무 방법론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낭독 기술, 연극 놀이, 디지털 매체 활용법
경영 및 기획	프로젝트 예산 편성,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최종 과제	실제 독서 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보고서 제출

3. 입학 조건 및 대상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자격)
- 학력/경력: 교육학, 도서관학, 문학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유치원, 학교, 도서관) 실무 경력자.
- 언어 능력: 독일어 C1 레벨 이상의 고도의 언어 구사 능력 필수.대상: 사서, 교사, 서점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 교육가 등.

4. 주요 교육 기관 (BVL 인증 기관)
- Jugendstil (NRW):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센터.
- Akademie fur Kulturelle Bildung: 문화 교육을 위한 연방 아카데미 (Remscheid 소재).
- Bayerische Akademie fur Schreibdidaktik: 바이에른 글쓰기 교수법 아카데미.

▶ 해외 사례 참고 ② : 도서 매개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 프랑스

도서관, 서점, 문화 센터 등에서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직업 교육 체계. 대학의 전문 학사(Licence Pro) 및 석사 과정과 민간 전문 기관의 자격 인증 과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1. 주요 교육 및 자격 유형

- 프랑스에서 도서 매개는 '도서 관련 직업(Metiers du livre)'의 핵심 역량으로 다뤄지며, 크게 학위 과정과 전문 자격 과정으로 나누고 있음.

① 대학 전문 학사 및 석사 과정 (Licence Pro / Master)
: 프랑스 대학(Universite)과 기술대학(IUT) 내의 'Metiers du livre' 학과에서 운영
: 핵심 교육 내용은 서지학, 독자 분석, 문화 이벤트 기획, 디지털 리터러시, 저작권법 등임
〈전문 학사 (Licence Professionnelle)〉 : 1년 과정. 도서관, 서점, 출판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독자 대상 문화 매개(Mediation culturelle)'가 필수 모듈로 포함
〈석사 (Master)〉 : 2년 과정. 문화 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 디지털 매체 활용 역량 등 고도의 전략적 매개 능력을 기름

② 아동·청소년 도서 매개 전문 자격 (Brevets d'aptitude)
: 아동 도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임. 주관 기관은 아동 도서 학교(L'Ecole du livre de jeunesse)이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매개 전문가를 위한 '능력 인증서 (Brevet)'를 발급함
〈단계별 구성〉 입문(Initie, 기본 지식 습득) → 숙련(Confirme, 장르별(그림책, 만화, 소설 등) 심화 매개 기술) → 전문가(Expert): 특정 대상(소외 계층, 다문화 등) 맞춤형 프로젝트 설계.

2. 교육 과정의 특징

-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창의적 참여'에 중점을 둠

주요 모듈	세부 내용
작품 분석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작용 이해, 문학적 가치 판별
대상별 접근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 계층(Publics empêchés) 연구
창의적 방법론	낭독, 스토리텔링, 작가와의 만남 기획, 디지털 인터랙티브 북 활용
현장 실습	도서관 또는 문화 기관에서의 12주 이상 실무 연수(Stage) 필수

3. 관련 주요 기관

- CNL (Centre National du Livre): 국립도서센터. 매개 프로젝트 지원 및 관련 포럼 개최.
- ABF (Association des Bibliothecaires de France): 프랑스 사서 협회. 현직자 및 예비 매개자를 위한 직무 보수 교육 운영.
- Fill (Federation interregionale du livre et de la lecture): 지역 도서 및 독서 연맹. 지역별 매개자 네트워크 및 교육 정보 제공.

* 추진 방향으로는 문학 커뮤니케이터의 핵심 역량을 문학 작품 해석·큐레이션, 독서 공동체 운영, 문학 이벤트 기획, 생애주기별 문학 상담 등으로 설정하고, 표준 교육과정과 국가 인증 자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과 문화기관에 문학 커뮤니케이터 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화하는 구조가 함께 논의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센터·돌봄센터·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으로 수요처를 확장하고, 세종학당·문화원 등 해외 거점을 통해 한국 문학 홍보 기능과도 연계하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 1차 세미나에서는 문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군이 도입되면 문학을 사랑하지만 작가가 되지 못한 수많은 문예창작과·국문과 졸업생들에게 의미 있는 직업 경로가 열릴 것이라는 공감이 형성되었다. 한 위원은 과학 분야에서 청소년의 희망 직업이 '과학자'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변화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문학 커뮤니케이터 역시 유사한 방향의 사회적 수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나. 문학 학예사 제도 도입 : 문학관 전문 인력 체계 구축

* 두 번째 방향은 전국 문학관에 문학 전문 학예사를 배치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기반의 학예사 제도는 고고학·미술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학 전공자가 문학관 학예사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 결과 문학관의 전시·연구·아카이빙 기능이 전문성 없이 운영되거나, 작가 유물이 망실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학관 전문 인력 제도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학관당 문학 전문 인력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문학 학예사 양성 및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학 자료 수집·보존·연구·전시·디지털 아카이빙을 포괄하는 직무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 다만 1차 세미나 토론에서는 문학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별도 자격 체계를 유지할 만큼의 고용 규모가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학예사에게 문학 관련 보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취약한 민간 문학관에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파견·지원하는 5개년 사업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논의되었다. 학예사 제도 도입과 문학관 확충 계획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2차 세미나에서는 문학 커뮤니케이터와 문학 학예사 두 제도를 통합하여 단일 위계 자격 체계(1급 문학학예연구사 / 2급 문학교육사 / 3급 문학매개자)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 신설 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요처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한시법 형식으로 5년 단위로 운영하며 이후 수요와 성과를 보고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도 병행 검토되었다.

다. 작가–서점 로컬 문학 거점 자매결연 지원

* 세 번째 방향은 창작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보완하는 서브잡 구조의 첫 번째 유형으로, 작가와 지역 독립 서점을 1:1로 자매결연하여 양자가 상호 지지하는 로컬 문학 거점을 형성하는 모델이다.

* 이 구상은 발제 위원이 동네 서점 네트워크 단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얻은 현장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서점은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 큐레이션 역량이 부족하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유통하고 독자와 만날 고정 거점이 없다는 두 수요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 상주작가 제도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이라면, 이 모델은 작가와 서점이 스스로의 가치와 지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작가는 해당 서점의 문화 기획자로서 독서 모임·글쓰기 워크숍·문학 이벤트·뉴스레터 발행 등을 수행하고, 서점은 작가 전용 서가 운영·홍보·공간 제공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 구조를 설계한다. 국가 보조금은 작가 활동비와 서점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료 멤버십·후원 시스템 등 자생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 소멸 대응, 생활 인구 유입, 하이퍼 로컬 문화 거점 형성 등 타 부처 정책 의제와도 접점이 있어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한편 서점이 문학 전문 서점이 아닌 경우 다양한 저자와 분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 작가와 서점의 기대 수준 차이로 인한 관계 균열 가능성 등 실행 과정의 쟁점도 함께 논의되었다.

라. 문화 소외 지역 작가 파견 지원

* 네 번째 방향은 섬·산간·접경 지역, 교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피해자 쉼터 등 문학 접근성이 낮은 공간에 작가를 파견하여, 기록·독서 프로그램·생애사 정리·문학적 치유 활동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기존 상주작가 제도가 공간(도서관·문학관 등)을 중심에 두었다면, 이 방향은 문학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발상의 전환에 기반한다.

* 작가 파견 모델은 문학사적 전통(리얼리즘 작가들의 현지 하방, 노동·농촌 현장 취재 등)과도 맥이 닿아 있으나, 워킹그룹은 이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적 맥락과 정책 목적에 맞게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이데올로기적 의도 없이 작가의 창작 경험 확장과 소외 지역의 문화 향유를 동시에 도모하는 공공 일자리 모델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 파견 형태는 단독보다 공동 파견 또는 릴레이 순환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격오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 교육과 지역 주민과의 그라운드 룰 설정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PRH 프로그램(소도시 공공도서관 지원), 클레멘트 코스(소외계층 대상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가 참고 모델로 공유되었다. 행안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사업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4.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의제 2는 세 차례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실현 과정에서의 구체적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난 의제였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격 제도화의 딜레마: 자격 체계 없이는 직업 전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자격을 신설하면 수요를 초과하는 인력이 배출되어 사장될 위험이 있다. 특히 문학 커뮤니케이터의 경우 공공 배치 구조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자격증이 실질적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 역할 중복과 경계 설정: 문학 커뮤니케이터, 문학 학예사, 북클럽 리더, 상주작가 등 여러 제도 간의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각 직군의 핵심 직무와 배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 공공도서관 중심의 수요처 한계: 문학 학예사의 경우 문학관 수가 너무 적어 독립적 자격 제도를 유지할 만한 고용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도서관·학교·돌봄센터 등으로 수요처를 확장하거나, 아파트 단지 도서관·지역 문화센터 등 일상 공간으로 배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 민원 및 공정성 문제: 파견 작가 사업에서 특정 작가가 집중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역 내 민원 발생 가능성, 자매결연 사업에서 작가–서점 간 기대 불일치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전·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의제 6과의 관계 설정: 이 의제에서 논의된 서브잡 구조와 의제 6(비예술·예술 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 안전망)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의제 2는 문학 직업 생태계 전반의 제도 설계에, 의제 6은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생계 연계 모델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정리되었다.

5.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2는 문학 지원 정책을 창작자 보호에서 문학 전문 인력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이 의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문학 전공자의 직업 경로 다양화: 작가 등단이라는 단일 통로 외에, 문학 커뮤니케이터·문학 학예사·서점 문화 기획자 등 문학 생태계 안에 남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됨으로써 인재 이탈을 방지한다.
- 문학의 사회적 매개 기능 강화: 공공도서관·문화시설·격오지 등 다양한 공간에 문학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시민이 문학을 접하는 경로가 구조적으로 확장된다.
- 창작자의 생계 안정과 창작 지속성 제고: 서브잡 구조를 통해 작가가 창작 활동의 연장선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경력 단절 없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지역 문화 거점 형성: 작가–서점 자매결연과 격오지 파견 모델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이식하고, 지역 서사를 축적하는 사회적 효과가 기대된다.

[표 3-3] 의제2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작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32.5%, 전업 작가 81%가 부업 병행 - 문학 전공자의 직업 경로가 사실상 등단(작가) 단일 통로에 한정 - 문화예술교육사·학예사 등 기존 제도에 문학 분야 부재 - 문학 생태계 내 매개 전문 직군(편집자·에이전트 등) 경력 단절 구조
정책 방향	- 문학 전문성을 직업 정체성으로 제도화 (전문 직군 신설) - 창작 지속을 위한 안정적 서브잡 구조 마련 - 문학 인력을 정책의 보호 대상에서 사회 기여 전문 인력으로 재정의
주요 추진 방향	① 문학 커뮤니케이터 전문 자격 신설 및 공공 배치 (전문 직군 트랙) ② 문학 학예사 제도 도입 : 문학관 전문 인력 체계 구축 (전문 직군 트랙) ③ 작가-서점 로컬 문학 거점 자매결연 지원 (서브잡 트랙) ④ 문화 소외 지역 작가 파견 지원 (서브잡 트랙)
주요 쟁점	- 자격 제도화의 딜레마 : 공공 배치 구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 커뮤니케이터·학예사·상주작가·북클럽 리더 간 역할 중복 및 경계 설정 - 문학관 수 한계로 학예사 제도 독립 유지의 고용 규모 부족 - 파견·자매결연 사업에서 작가 간 경쟁·민원 발생 가능성 - 의제 6(생계 안전망)과의 역할 분담 명확화
기대 효과	- 문학 전공자 직업 경로 다양화 및 인재 이탈 방지 - 공공 공간에 문학 전문 인력 배치로 시민의 문학 접근성 강화 - 창작자 생계 안정 및 경력 단절 없는 창작 지속 가능성 확보 - 지역 소멸 위기 지역 내 문화 거점 형성 및 지역 서사 축적

* 의제 2는 문학 정책의 수혜 범위를 '작가 지원'에서 '문학 생태계 전체 인력 생태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제 1과 연동되며, 문학 매개 인력의 배치와 활동이 실질화되려면 의제 7(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제 7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제3절 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 기반 재건과 균형발전 전략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수도권 편중과 지역 문학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

* 한국의 문학 생태계는 출판·문단·인프라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있으며, 지역 문학 생태계는 인력·공간·정보 접근성의 세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 열위에 놓여 있다. 발제를 맡은 위원은 서점 편람 통계를 근거로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7개소에 달하고, 소멸 예정 서점이 29개소에 이른다는 점을 제시하며, 지역 문학 생태계의 실태가 통계적으로나 직관적으로나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 워킹그룹은 지역 문학의 위기가 단순히 작가 활동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역 소멸은 서사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기억과 언어·생활 서사가 사라지는 과정은 곧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자체가 해체되는 과정과 직결된다. 이 문제는 특정 작가나 단체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흡수되어 온 구조적 결과물이다.

🗁 [의제3] 지역/비주류 문학 생태계(비수도권/장르 등) 기반 재건과 균형발전 전략 : 발제

> 2022년 기준 서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 7개소, 소멸 예정 서점 29개소. 지역 문학의 약화는 단순한 작가 활동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언어, 생활 서사가 사라지는 과정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서사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문학을 균형발전 정책의 부수 영역이 아닌 핵심 문화 자산으로 재위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차 세미나)

나. AI·디지털 전환과 지역 예술인의 이중 격차

* 이 의제는 지역 문학의 위기와 함께, AI 기술 확산이 가져오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2025년 12월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등 정부 차원의 AI 산업 진흥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예술·창작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 윤리적 편향, 문화 다양성 훼손,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지역 예술인은 AI 기술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교육 기회 측면에서 이중의 격차에 놓여 있다.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AI를 단순 배척하기보다 예술가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AI가 넘쳐나는 시대에 '문학·예술 분야만큼은 AI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설계하는 역발상적 접근도 제시되었다. 두 입장 모두 지역 기반의 구체적 대응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다. 문해력 위기와 사회적 소통의 약화

* 1차 연도 인터뷰와 워킹그룹 논의 전반에 걸쳐 문해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핵심 문제로 제기되었다. 유튜브·숏폼 중심으로 지식 소비 방식이 재편되면서 텍스트에 대한 친밀성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학습 능력의 저하를 넘어 타자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소통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 한 위원은 문해력을 단순히 읽고 쓰는 기능적 능력으로 국한하지 않고, 유네스코 정의에 따라 '맥락을 짚어내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이를 사회 통합과 민주적 소통의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문해력 향상은 교육 정책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정책이 공공적으로 기여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된다.

2. 정책적 지향

* 의제 3의 핵심 지향은 지역 문학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의 서사와 인력을 중심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 지역 내부 발굴 우선: 외부 작가의 파견·유입보다,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문학 인력과 서사 자원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 AI·디지털 전환의 주체적 대응: 기술 변화를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공공 인프라를 마련하되, 문학 고유의 심층적 독해 능력을 차별성으로 강화한다.
- 다층적·연계적 접근: 서사 발굴, 문해력 교육, AI 대응, 권역 연대, 문학 특화도시 등 다양한 층위의 사업을 파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학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연계·통합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3. 주요 추진 방향

* 의제 3에서는 여섯 가지 세부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발제 위원의 초안을 바탕으로 워킹그룹의 전체 토론을 거쳐 방향이 정제되었으며, 이후 2차 세미나에서도 문해력 교육과 지역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 지역 AI 예술인 지원 거점 운영 : 기술 변화의 주체적 대응

* AI 기술이 창작 환경 전반을 급속히 재편하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이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공공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중소규모의 AI 예술인 지원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예술인의 AI 리터러시 교육·실습·상담을 핵심 기능으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AI를 순수하게 지원·활용하는 기능과, AI가 없는 '창작 디톡스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AI가 모든 분야에 침투하는 시대에 오히려 문학·예술 분야가 '인간 고유의 사유와 글쓰기'를 특화하는 영역으로 차별성을 확보하는 역발상적 접근이 제안된 것이다. 한 위원은 이 방향이 문학 의제에 담기려면 '왜 문학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재원 설계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문화세로 개편하여 문화 영역에도 일정 부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기존 세원 구조 안에서 현실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서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지역 서사 발굴 및 '제땅말 이야기꾼' 레지던스

* 지역 문학 재건의 핵심으로, 지역 고유의 언어·사투리·생활 서사를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문학적 역할을 수행하는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를 발제 위원은 '제땅말 이야기꾼'이라고 명명하였다. 제땅말이란 지역 고유의 말(즉 사투리와 생활 언어)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서사 발굴이 지역 정체성 복원의 핵심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이 방향은 외부 작가를 지역으로 파견하는 방식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와 문예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원·마을회관·경로당·도서·산간 지역 등 세대 통합과 지역 기억 보존이 필요한 현장에서 기록·구술 채록·생애사 아카이빙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다.

* 일본 가미야마 사례가 모델로 공유되었다. 산간 마을임에도 도쿄의 IT 기업들이 다수 입주한 이 마을의 핵심 동력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20~30명의 예술가들이 마을에 체류하며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이 예술가에게 지역 공헌이나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즐겁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운영된다는 점이다. 워킹그룹은 이 방식이 국내 레지던스 사업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공유하였다.

* 발제자는 2차 세미나에서 기존의 창작 중심 레지던스를 이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지역 소멸 기금·행안부 지역 대응 사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 삶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 제작·보급

* 문해력 문제는 단순한 읽기·쓰기 능력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소통과 민주적 시민성의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 방향이 설정되었다. 학교·평생학습 현장에 문학 작가를 훈련·파견하여 읽기와 토론 중심의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한 위원은 문해력 향상의 핵심이 쓰기보다 읽기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강조하면서, 세계문학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비경쟁적 독서 토론 방식 등을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강원도 홍천여고 독서반의 사례가 좋은 모델로 공유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읽기·보기·하기를 결합한 문해력 교육 방식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 2차 세미나에서는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예산 확보 측면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며, 정부가 독서국가추진위원회 발족(2026년 1월) 등을 통해 이 이슈를 주요 국정 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정책적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만 교육부·교육청과의 협력 구조 구축이 현실적 허들로 남아 있으며, 학교 현장 진입 시 교사와의 역할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다.

라. 문학상주작가 사업 확대 및 새로운 공간 발굴

* 현재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학 상주작가 사업은 참여 작가와 수용 기관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으로, 이를 단순히 규모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발굴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 한 위원은 저수지 상주작가, 작은 간이역 상주작가, 마을회관 상주작가 등 상징성 있는 지역 공간과 결합한 상주 모델을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상투적인 공간을 벗어나 지역의 일상적 거점에 작가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 문학의 일상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방향은 의제 2에서 논의된 서브잡 구조와도 연결되면서, 작가에게는 안정적 활동 기반을, 지역 주민에게는 문학과의 일상적 접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마 초광역권·신문화권 문학 콘텐츠 발굴 및 교류

* 행정 경계를 넘는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매개로 지역 문학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간 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민간 문학단체가 공통의 의제(자연환경, 역사, 지역 차별 해소 등)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역문화진흥원이 2023년 시범적으로 진행한 금강 워킹 프로그램 등의 선례가 있으나, 지역 간 연대를 통한 문학 콘텐츠의 지속적 생산과 지역 정체성 강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은 예술위원회가 특정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범 모델을 먼저 구축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예컨대 전남도와 기초 지자체들 간의 역할 분담 모델(기초재단 → 발표 지원, 광역재단 → 발간 지원, 예술위원회 → 전국 단위 마케팅·펠로우십)을 시범 운영한 후 확산하는 접근이 제시되었다.

바 권역별 문학 특화도시 지정

* 문학 생태계가 도시 단위에서 구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문학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인증하여 지자체의 매칭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사례(에든버러, 더블린 등)와 국내 부천시·원주시의 경험이 참고 모델로 공유되었다.

* 특히 에든버러와 더블린은 블룸스데이 등 문학 중심 문화행사와 스토리텔링 콘텐츠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한 성공 사례로 제시되었다. 반면 원주시의 경우 지정 이후 담당 공무원의 지속성 부재와 거버넌스 파행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설계 시 시민 중심 거버넌스와 행정의 지속성 확보가 필수 요건임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논의되었다.

* 한 위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정부 인증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매칭 재원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작은 도시부터 자체 조례 제정, 시민 거버넌스 구축, 자율적 문학 활동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4.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의제 3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내부 인력 vs. 외부 작가 파견: 제땅말 이야기꾼이나 문해력 파견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외부 작가를 파견하는 방식은 지역 내 기존 작가·문학단체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 위원은 지역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작가들이 지역 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파견보다 지역 거주 작가 발굴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의제 간 중복 문제: 제땅말 이야기꾼과 격오지 작가 파견(의제 2), 문해력 프로그램과 북클럽 리더·문학 커뮤니케이터(의제 2·4) 등 여러 의제 간 내용이 중첩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세부 과제 단위에서의 재배치와 의제 간 역할 분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 AI 대응의 의제 범위 문제: AI 지원 거점 방향이 문학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은 예술가의 관점에서 AI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학 생태계를 보전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의제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지자체 협력 구조의 현실적 한계: 기초재단·광역재단·예술위원회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지자체의 행정 역량 차이, 담당 인력 부족, 사업 신뢰 구조 미비 등으로 인해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정 지자체와의 시범 모델 구축 후 점진적 확산이 현실적 접근으로 제안되었다.
- 문학특화도시 지정 이후 관리 부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사례처럼, 지정 자체에만 몰입하고 이후 지속적 운영과 거버넌스에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시민 중심 거버넌스와 행정 지속성이 사전에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설계의 핵심 조건으로 정리되었다.

5.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3은 지역 문학을 균형발전 정책의 부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는 핵심 기반으로 재위치시키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이 의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 문학 인프라 복원: 서사 발굴·문해력 교육·상주작가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문학 생태계의 자생적 토대가 형성된다.
- 지역 정체성 강화: 제땅말 이야기꾼을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언어와 서사가 기록·보존되며, 이는 지역 브랜딩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 문해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소통 회복: 학교·평생학습 현장에서의 작가 파견 프로그램이 독서율 향상과 민주적 소통 능력 강화에 기여한다.
- AI 시대 예술가 대응 역량 제고: 지역 기반 AI 리터러시 교육 거점을 통해 지역 예술인이 기술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 지역 간 교류와 초광역 연대: 권역별 문학 콘텐츠 교류와 문학 특화도시 지정이 지역 간 연대의 구조를 만들어 고립된 지역 문학 생태계를 네트워크화한다.

[표 3-4] 의제3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수도권 편중 심화로 지역 문학 인프라의 구조적 위축 - 서점 없는 기초자치단체 7개소, 소멸 예정 서점 29개소 -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 예술인의 이중 격차 - 문해력 저하 : 사회적 소통과 민주적 시민성 약화
정책 방향	- 지역 내부 서사·인력 발굴 우선 (외부 파견 중심 탈피) - AI 기술 변화의 주체적 대응 인프라 마련 - 다층적 사업의 연계·통합 구조 설계
주요 추진 방향	① 지역 AI 예술인 지원 거점 운영 (AI 적응 + 창작 디톡스 공간) ② 지역 서사 발굴 및 제땅말 이야기꾼 레지던스 ③ 삶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 제작·보급 ④ 문학상주작가 사업 확대 및 새로운 공간 발굴 ⑤ 초광역권·신문화권 문학 콘텐츠 발굴 및 교류 ⑥ 권역별 문학 특화도시 지정
주요 쟁점	- 외부 파견 vs. 지역 내부 인력 발굴 우선 원칙 - 의제 2·4와의 내용 중복 : 세부 과제 재배치 필요 - AI 대응의 문학 정책 의제 범위 논쟁 - 지자체 협력 구조의 현실적 역량 한계 - 문학특화도시 지정 후 관리·거버넌스 지속성 담보
기대 효과	- 지역 문학 인프라 복원 및 자생적 생태계 형성 - 지역 고유 서사·언어의 기록 보존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 문해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소통 기반 회복 - 지역 예술인의 AI 대응 역량 제고 - 지역 간 문학 교류와 초광역 네트워크 형성

✻ 의제 3은 지역·비주류 문학이라는 단일 영역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제 2(문학 직업 생태계)·의제 4(독서·문해력 소비 기반)·의제 7(거버넌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복합 의제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 문학 생태계의 재건은 전국 단위의 정책 조율과 타 기관·지자체와의 협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의제의 성공 여부는 의제 7에서 다루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4절 독서·문해력 위기 대응을 위한 문학 소비 기반 전면 개편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역설적 현실 : 열광과 이탈의 공존

* 발제를 맡은 위원은 이 의제의 출발점이 된 하나의 역설을 제시하였다. 북 페스티벌과 독서 모임 행사에는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몰려들고, 서울도서관의 '힙독클럽' 모집은 수십만 명 규모로 지원이 쏟아진다. 그런데 왜 독서율은 계속 낮아지고, 문해력은 저하되며, 책은 팔리지 않는가. 행사장에서의 열기가 끝나면 왜 그렇게 빠르게 식어버리는가.

* 이 역설은 문제의 본질이 독자의 의지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워킹그룹은 문학을 처음 접하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구조적 경로 자체가 단절되어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학교 도서관에 책이 쌓이고, 지역 도서관이 늘어나고, 교사들이 독서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문해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문학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며 공동체적으로 향유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 [의제4] 독서·문해력 위기 대응을 위한 문학 소비 기반 전면 개편 : 발제

> 북 페스티벌에 대한 열광과 독서율 저하가 공존하는 역설. 기존 문학 정책은 창작·발간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 독자 형성 → 소비 전환 → 재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위 사업들로는 해결 가능성이 낮으며, 형성 → 운영 → 확산 → 전환 → 확장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차 세미나)

나. 창작 지원 중심 정책의 구조적 공백

* 한국의 문학 지원 정책은 오랫동안 창작과 발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독자를 형성하고, 향유 경험을 소비 행동으로 전환하며, 문학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과정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북클럽과 독서 모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인력과 구조, 재원이 없다. 문학 축제는 거행되지만 독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작가를 위한 시상식과 관람형 행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 발제 위원은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에서 이 문제를 직접 목격하였다. 전국 수천 군데에 책이 배포되지만 박스째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생긴다. 독서 모임을 모집하면 참여 열의는 높지만 모임을 이끌 리더가 없다. 북페스티벌 예산이 있어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단위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낳았다.

다. 문해력 저하의 사회적 의미

* 최근의 독서율 하락과 문해력 저하는 단순한 개인의 독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숏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지식 소비 방식이 재편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다.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위축되면서, 혐오 확산과 이분법적 소통 방식의 강화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워킹그룹은 이 문제를 교육 정책의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문학을 통한 깊이 있는 읽기와 해석 경험이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였다. 한 위원이 제기한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1인 가구의 증가, 혁신도시 이주민의 고독, 중장년 고독사 문제)는 문학 기반의 공동체적 향유 경험이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독서 진흥을 넘어, 문학 소비 기반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2. 정책적 지향

* 의제 4는 문학 정책의 초점을 공급(창작·발간 지원)에서 수요(독자 형성·향유·소비)로 확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지향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연계형 향유 생태계 구축: 단위 사업의 파편적 추진이 아니라, 독자 모임 형성 → 리더 배치 → 콘텐츠 확산 → 소비 전환 → 축제 확장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한다.
- 문학의 고유성 확보: 향유와 소비를 확대하되, 자기계발서·장르소설·인문학 일반과 구별되는 문학 고유의 경험(해석, 감응, 공동체적 토론)을 정책의 핵심으로 유지한다.
- 자발성과 제도적 지원의 균형: 북클럽과 독서 모임은 본질적으로 자발적 문화 현상이다. 정책은 이를 행정 주도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틀을 강제하기보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에 인프라와 소비 촉진 장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3. 주요 추진 방향

* 의제 4에서는 다섯 가지 세부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방향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가장 큰 효과는 이것들이 하나의 연계 구조로 작동할 때 나타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가. 생활권 문학 북클럽 지원 : 향유의 최소 단위 형성

* 문학은 혼자 읽는 것으로 향유가 완성되기보다, 함께 읽고 해석하며 감응을 나누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더 풍부해진다. 이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학 북클럽에 공공이 지원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 발제 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독서 모임 문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만남과 생활권 이탈을 원하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의 광범위한 모집이 효과적이다. 반면 지역에서는 수십 년간 함께한 공동체의 결속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중심의 모임이 더 적합하다. 정책 설계는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은 동네·직장·대학·지역 커뮤니티 등 생활 반경 안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문학 중심 북클럽으로 설정한다. 자기계발서·힐링서 등으로 흐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석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리스트를 강제하는 방식보다 참여자의 취향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순문학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북클럽 리더 양성 및 배치 : 향유의 지속을 떠받치는 사람

* 북클럽의 지속성과 밀도는 공간이나 예산보다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한 위원은 문학나눔 사업을 통해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는 많지만 모임을 이끌 리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였다.

* 이 방향은 독자 모임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을 북클럽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리더의 역할은 지식 전달이나 강의가 아니라, 해석과 대화를 촉진하고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관리하는 매개 역할로 정의된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리더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작가를 리더로 배치하면 문학성은 높아지지만 문학 일자리 사업으로 왜곡될 수 있고, 일반 독서 애호가를 리더로 하면 자발성은 살릴 수 있지만 문학의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 위원은 리더 구성에 작가만이 아니라 치과의사·농부·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이 스스로 문학 도서를 큐레이션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한 위원은 이 방향을 행정 주도의 양성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검증된 독서 리더들과 협업하거나 이들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 문학 콘텐츠 활동가 육성 : 향유의 사회적 확산

* 북클럽 내부에서 이루어진 문학 향유 경험이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가려면, 이를 콘텐츠와 이벤트로 기획·전달할 수 있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이 방향은 문학 경험을 다양한 채널과 형식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 워킹그룹에서는 유튜브·SNS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문학·독서 크리에이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새로 사람을 양성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콘텐츠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위원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문학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차별화된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순문학 작품을 다루는 비율을 지원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문학 소비 마중물 제도 : 향유에서 소비로의 연결

* 문학 향유 경험이 실제 도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단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방향이 제안되었다. '소비 마중물'이라는 개념은 무상 지원이 아니라, 향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첫 구매 행동을 시작하도록 돕는 제한적·조건부 지원 장치다.

* 구체적으로는 북클럽 참여자 등 이미 문학 향유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자기 부담을 전제로 도서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교보문고·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제휴하여 순문학 작품 구매 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예산 통제도 가능하고 순문학으로의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이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첫째, 할인 이벤트와 구별되는 정책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도서 구매 지원이 순문학이 아닌 장르소설·자기계발서·웹소설 등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에도 영화·대중음악 쪽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참고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 두 우려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해소하느냐가 이 방향의 실효성을 결정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마. 문학 축제 스케일업 : 독자 체험형 축제로의 전환

* 전국 각지에서 작가 이름을 딴 문학 축제가 크고 작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상식·강연·질의응답의 관람형 행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독자가 문학을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방향은 기존 문학 축제의 성격을 참여·체험·토론 중심의 독자 지향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축제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변화는 예산이 아니라 기획하는 사람. 즉 문학과 독자 경험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 기획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 기획자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축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 기획사와의 협업 구조를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한 위원은 군산 북페어 사례를 들어, 출판사·서점·독자가 함께하는 자발적 북페어 방식이 오히려 참여자의 에너지를 더 끌어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정부가 주도해서 대규모로 여는 방식보다, 문학 축제를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기존 주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4.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의제 4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예술위원회의 향유 사업 범위 문제: 북클럽·독서 모임 지원이 예술위원회의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지자체·생활문화재단 등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중복 우려도 존재한다. 워킹그룹은 문학에 특화된 향유 기반을 공공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도 이 역할을 맡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수렴하였다.
- 자발성과 행정 주도 사이의 균형: 북클럽은 본질적으로 자발적 문화 현상이다. 정부가 리더를 양성하고 모임 방식을 설계하는 방식은 이 자발성과 충돌할 수 있다. 한 위원은 행정 주도적 양성보다 이미 활동 중인 사람들을 발굴·지원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 문학 고유성 유지의 어려움: 지원금이 투입되면 자기계발서·힐링서·웹소설 등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문학 작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누가 판단하느냐는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았다. 워킹그룹에서는 리더의 재량과 출발점 주제 설정이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 수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북클럽 리더–문학 커뮤니케이터 중복: 북클럽 리더와 의제 2에서 논의된 문학 커뮤니케이터 개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문학 커뮤니케이터가 전문 직군으로 제도화된다면 북클럽 리더는 그 직군의 활동 형태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며, 두 사업의 통합 또는 역할 분담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소비 마중물의 실효성과 정책 정당성: 정책이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원이 순문학이 아닌 상업적 콘텐츠로 쏠리는 위험, 단순 할인 이벤트와의 구별 문제가 설계의 핵심 난제로 남았다.

5.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4는 문학 정책의 수혜자를 창작자에서 독자로 확장하는 전환의 의미를 가진다. 이 의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문학 향유의 생활권 내 정착: 생활권 기반 북클럽 지원을 통해 문학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공동체적 문화 활동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된다.
- 문학 독자층의 지속적 형성: 리더를 통한 북클럽 운영 안정화, 콘텐츠 활동가를 통한 문학 정보 확산, 소비 마중물을 통한 첫 구매 경험 연결이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층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 문학 소비 시장의 구조적 기반 조성: 향유 경험을 실제 도서 구매로 연결하는 마중물 장치가 작동하면, 문학 소비 시장이 공공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 사회적 고립 완화와 공동체 회복: 문학 기반 독서 공동체가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가진 시민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 기능을 수행한다.
- 문학 축제의 질적 전환: 관람형에서 참여·체험형으로 전환된 문학 축제는 독자가 문학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표 3-5] 의제4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열광(북 페스티벌)과 이탈(독서율 저하)의 역설 : 향유에서 소비로의 연결 단절 - 창작·발간 지원 중심 정책 구조 → 독자 형성·소비 전환 정책의 공백 - 북클럽 수요 증가에 비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인력 부재 - 문해력 저하 : 소통 기반 약화 및 사회적 고립 심화
정책 방향	- 창작 지원 → 독자 형성·향유·소비로 정책 초점 확장 - 단위 사업 파편적 추진 → 형성·운영·확산·전환·확장의 연계 구조 - 문학 고유성 확보 + 자발성과 제도적 지원의 균형
주요 추진 방향	① 생활권 문학 북클럽 지원 (생활권 기반, 문학 해석·토론 중심) ② 북클럽 리더 양성 및 배치 (다양한 직업군, 매개 역할 중심) ③ 문학 콘텐츠 활동가 육성 (민간 플랫폼 협업, 리워드 기반) ④ 문학 소비 마중물 제도 (조건부 도서 구매 지원, 순문학 유도) ⑤ 문학 축제 스케일업 (관람형 → 참여·체험·토론형 전환)
주요 쟁점	- 예술위원회의 향유 사업 범위 : 지자체·생활문화 사업과의 중복 우려 - 자발성 존중 vs. 행정 주도적 양성·운영 방식의 충돌 - 문학 고유성 유지 : 자기계발서·웹소설 쏠림 방지 기준 마련 - 북클럽 리더와 문학 커뮤니케이터(의제 2)의 역할 중복 - 소비 마중물의 정책 정당성 및 지원 범위 설정
기대 효과	- 생활권 내 문학 향유 공동체의 지속적 형성 - 향유 → 소비 연결 구조 구축으로 문학 시장의 자생 기반 조성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문학 정보 확산과 새로운 독자층 형성 - 독서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 및 공동체 회복 - 독자 지향 문학 축제로의 전환을 통한 문학 소비 체험 확대

* 의제 4는 문학 정책의 공급 중심 구조를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제 1(창작 전주기 지원)과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 의제 1이 창작자와 생태계 주체들이 지속 가능하게 창작·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의제 4는 그 창작물이 독자에게 도달하고 소비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두 의제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문학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제5절 문학작품의 매개/전달체계 혁신(플랫폼/미디어/콘텐츠 융합)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독자의 소비 패턴 변화와 문학의 전달 단절

* 발제를 맡은 위원은 이 의제의 출발점을 독자의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에서 찾는다. 과거에는 독자가 서점에 직접 찾아가 책을 고르고 구매하는 능동적 행동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추천 알고리즘이 콘텐츠 소비의 주된 경로가 되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흐름 속에 문학이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문학 콘텐츠의 활용은 여전히 미흡하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 발간되더라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닿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기존의 문학 전달 체계는 작가 → 출판사 → 서점 → 독자의 선형적 구조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는 영상·쇼츠·SNS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한다. 문학이 이 새로운 경로에 진입하지 못하면 독자와의 접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워킹그룹은 이 구조적 단절이 작가의 생존권 위협, 문학 시장 축소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의제5] 문학작품의 매개/전달체계 혁신(플랫폼/미디어/콘텐츠 융합) : 발제**

>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와도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생태계 선순환은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디지털 플랫폼의 문학 활용이 미흡하고, 작품이 독자에게 닿지 못하는 단절 현상은 작가 생존권 위협, 문학 시장 축소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독자 소비 패턴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는 매개·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1차 세미나)

나. 기존 전달 체계의 한계와 새로운 경로의 필요성

* 문학 콘텐츠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부상한 북튜브(BookTube)와 SNS 기반 콘텐츠는 문학 전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뚜렷한 한계도 드러낸다. 출판사가 북튜버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문학도서의 경우 수익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아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기계발서·교육도서와 달리 순문학 작품은 광고주가 없고, 북튜버들도 제작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구조다. 그 결과 문학 분야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 오디오북 시장 역시 양면적 현실을 보여준다.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AI 텍스트 음성 변환(TTS) 방식의 저품질 서비스가 이용자 경험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공공이 오디오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저작권 침해 없이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제기되었다.

다. 공공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

* 의제 5 논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은 공공이 독서·문학 플랫폼을 직접 개발·운영하는 방향의 타당성 문제였다. 한 위원이 제안한 플랫폼 구상(O2O 독서 커뮤니티, 맞춤 독서 경험 시스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독서 습관 형성, 문학 IP 기반 2차 콘텐츠 지원)은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이것을 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단일 사업으로 설계하기보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한 위원은 공공이 플랫폼을 직접 개발·운영하면 민간 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 사용자 모집 실패 리스크, 유지보수 비용 지속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기술 개발은 R&D 과제 방식으로 추진하고 실제 운영은 적합한 민간 사업자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는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2. 정책적 지향

* 의제 5의 핵심 지향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닿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세 가지 축의 접근을 설정하였다.

- 인적 매개와 기술적 매개의 병행: 의제 2(문학 커뮤니케이터 등)에서 다룬 인적 기반 매개 체계와, 의제 5에서 다루는 플랫폼·미디어 기반 기술적 매개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 공공 역할의 재정의: 공공이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R&D 지원),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문학 특화 영역의 콘텐츠 지원,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구조 설계를 공공 역할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 문학 고유성 유지: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더라도 순문학의 고유한 가치(심층적 독해, 비평적 해석, 감응의 공유)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주요 추진 방향

* 1차 세미나에서 제시된 플랫폼 구상과 워킹그룹 전체 토론의 결과로, 의제 5는 크게 세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단일 플랫폼 방식보다, 각 방향별로 역할과 주체를 분리하는 구조로 재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가. 문학 특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개발 기반 조성 (R&D 연계)

* 한 위원이 제안한 독서 커뮤니티 플랫폼 구상(위치 기반 서점 연계 O2O 독서 모임, 독서 유형 진단(BBTI), 독서 기록 게이미피케이션, 책 맞춤 추천 알고리즘)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학 특화 디지털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워킹그룹은 이 구상이 예술위원회가 일반적인 사업 방식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인식하면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콘텐츠진흥원 연계 R&D 과제 형식으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적합한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 이 방향에서 공공의 역할은 문학 분야에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초기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처를 연결하는 것이다. 예술 분야 R&D는 콘텐츠 산업과 달리 그간 불모지에 가까웠던 만큼, 이 시도 자체가 예술·문학 분야의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2차 세미나에서 한 위원은 사이버 문학광장 등 기존 공공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작가·독자 정보를 연계하는 공공 에이전시 기능을 플랫폼에 탑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 문학 IP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 두 번째 방향은 문학 작품의 IP를 활용한 영상·오디오·숏폼 등 2차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다. 문학 원작 기반 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될 경우 원작 도서의 바이럴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독서율 향상과 문학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두 트랙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는 검증된 콘텐츠 크리에이터(북튜버·유튜버·문학 기반 인플루언서)가 공모를 통해 특정 문학 작품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다. 북튜버들이 문학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익 부재에 있는 만큼, 공공이 제작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문학 분야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내 독자 반응 데이터(찜하기, 완독 인증 등)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작품에 대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데이터 기반 선정 방식이

* 이 방향은 의제 1(문학 IP 확장·콘텐츠화)과 내용상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의제 1이 창작 단계에서의 IP 확장 지원을 다룬다면, 의제 5는 이미 발간된 작품의 디지털 채널 전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다. 기존 디지털 채널·민간 플랫폼의 문학 활용 촉진

* 세 번째 방향은 공공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대신, 유튜브·SNS·전자책 플랫폼 등 이미 시민들이 대규모로 이용하는 민간 채널에서 문학 콘텐츠가 더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유튜브·숏폼 등에서 문학 기반 콘텐츠를 생산하는 신진 크리에이터를 발굴·지원하는 방안,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문학 관련 콘텐츠에 대한 리워드 구조를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민간 플랫폼에서 이미 팔로워와 영향력을 검증받은 문학·독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공이 순문학 콘텐츠 제작 비율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 오디오북의 경우, 현재 민간 플랫폼의 AI TTS 방식이 저품질 논란과 저작권 분쟁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문학 작품의 고품질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장애인·격오지 주민·병영 장병 등 문학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게 우선 제공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는 오디오 콘텐츠를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문학 접근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상 구조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4.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의제 5 논의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공공 플랫폼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공공이 독서·문학 플랫폼을 직접 개발·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사용자 모집 실패 리스크, 민간 시장 잠식 비판, 장기적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워킹그룹은 공공이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더 적합하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수렴하였다.
- 의제 1·2·4와의 역할 중복: 문학 IP 확장(의제 1), 문학 커뮤니케이터(의제 2), 북클럽·콘텐츠 활동가(의제 4) 등과 내용이 중첩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의제 5의 차별성은 플랫폼·미디어·기술 기반의 전달 체계 혁신에 있으므로, 인적 매개(의제 2·4)와 기술적 매개(의제 5)를 상호 보완 관계로 설정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 민간 시장과의 경계 설정: 밀리의 서재·리디북스·알라딘 등 이미 민간이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면 민간과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공공 플랫폼은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순문학 특화, 지역 서점 연계, 접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포지셔닝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북튜버·크리에이터 지원의 상업성 문제: 공공이 특정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상업 광고 지원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순문학 작품 중심의 콘텐츠로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교육·공익적 성격의 콘텐츠를 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오디오북 저작권 문제: AI TTS를 활용한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서 저작자의 동의와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공공이 지원하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은 저작권 계약을 전제로 하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원칙으로 정리되었다.

5.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5는 문학 정책의 전달 단계(작품이 만들어진 후 독자에게 도달하는 과정)를 처음으로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의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문학 콘텐츠의 디지털 생태계 진입: 문학 작품이 유튜브·SNS·오디오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독자에게 닿는 경로가 다양화되고, 특히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확장된다.
- 문학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 육성: 북튜버·문학 기반 크리에이터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지원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문학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활성화된다.
- 문학 작품과 독자 간의 구조적 연결: 데이터 기반 도서 추천, 독서 기록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독자가 자신에게 맞는 문학 작품을 더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취약계층 문학 접근권 강화: 고품질 오디오북 제작 지원과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격오지 주민 등 기존 문학 소비 경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문학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 예술 분야 R&D 기반 구축: 문학 특화 플랫폼 기술 개발을 R&D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예술 분야에서 기술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선례를 만든다.

[표 3-6] 의제5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소비 시대에 문학의 디지털 전달 체계 부재 - 북튜브 생태계의 수익 구조 부재 → 크리에이터 지속 활동 불가 - AI TTS 오디오북의 저품질·저작권 문제 미해결 - 공공 플랫폼의 민간 시장 잠식 우려 및 운영 지속 가능성 문제
정책 방향	- 공공이 플랫폼 직접 운영 → R&D 방식 기술 개발 + 민간 이전·협업 - 인적 매개(의제 2·4)와 기술적 매개(의제 5)의 상호 보완 구조 - 민간이 하지 않는 순문학 특화·접근 취약계층 지원 영역에 공공 집중
주요 추진 방향	① 문학 특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개발 기반 조성 (R&D 연계) - O2O 독서 커뮤니티, 독서 유형 진단,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 예술위·문체부·콘진원 컨소시엄 방식의 기술 개발 ② 문학 IP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 크리에이터 공모 방식 + 데이터 기반 자동 선정 - 작가·크리에이터 협업 바우처 제도 도입 ③ 기존 디지털 채널·민간 플랫폼의 문학 활용 촉진 - 민간 플랫폼 협업, 순문학 비율 기준 리워드 설계 - 고품질 오디오북 제작 지원 및 취약계층 접근권 강화
주요 쟁점	- 공공 플랫폼 운영의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 - 의제 1·2·4와의 역할 중복 : 기술적 매개로 차별성 명확화 필요 - 민간 시장 잠식 우려 : 순문학 특화·취약계층 지원 영역에 집중 - 크리에이터 지원의 상업성 문제 : 공익성 기준 설정 - 오디오북 AI TTS 저작권 보상 구조 마련
기대 효과	- 문학 작품의 다채널 디지털 전달 체계 구축 - 문학 분야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 육성 - 독자의 작품 발견·접근 경로 다양화 - 취약계층 문학 접근권 강화 - ·예술 분야 R&D 기반 구축 선례 마련

* 의제 5는 문학 생태계의 '마지막 구간', 즉 만들어진 작품이 독자에게 실제로 닿는 경로를 다루는 의제다. 이 의제는 의제 1(창작 전주기 지원)이 전반부의 구조를 다루고, 의제 4(독서·소비 기반)가 독자 측의 구조를 다루는 것과 함께, 전체 문학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세 번째 축을 담당한다. 세 의제가 연동하여 설계될 때 비로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 독자에게 전달되고 → 소비로 이어지는' 문학 생태계의 완전한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

제6절 비예술 · 예술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안전망 구축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창작 중단의 원인은 역량 소진이 아니라 생계 기반 상실

* 발제를 맡은 위원은 이 의제를 설계하면서 공공 일자리 모델을 중심에 두었다. 그 출발점은 1차 연도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였다. 등단 이후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중견 작가들이 창작 현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이유가 창작 의욕이나 역량의 소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삼아 작품을 써오다 어느 시점에 소재 고갈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에 마침 결혼과 육아·가족 부양이라는 생계 부담이 겹치면서 창작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워킹그룹은 단순히 창작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작가의 창작 역량이 공공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그 일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동시에 새로운 경험과 창작 소재까지 축적할 수 있는 구조, 즉 비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이 결합된 공공 일자리 모델을 설계하자는 것이 의제 6의 핵심 발상이다.

🗁 [의제6] 비예술 · 예술활동 결합형 작가 생계안전망 구축 : 발제

> 작가들이 창작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는 역량 소진보다는 생계 기반 상실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 작가가 가진 집필·구술·채록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일자리가 제공되면 창작 지속과 생계 보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 니즈가 있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수요처를 중심으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1차 세미나)

나. 구조적 조건 : 전국적 니즈와 수요처의 지속성

* 공공 일자리 모델 설계의 두 가지 핵심 조건으로 전국적 니즈와 수요처의 지속성을 제시하였다. 작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특정 지역이나 한시적 사업에 한정되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검토하면서 워킹그룹이 가장 먼저 떠올린 수요처가 주민자치위원회였다. 전국에 약 3천 개 이상 존재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 조직이며, 소상공인·지역 유지·주부·청년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지역 생활 현장에 밀착해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접할 수 있는 인간 군상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판단이었다.

* 그러나 1차 세미나 토론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수요처로 삼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이고, 예산이 지역 내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으며, 작가를 단순 용역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주민자치위원회 단독 연계보다, 보다 공공성이 담보된 수요처와의 연계 구조를 보완적으로 탐색하였다.

다. '집필 용역'으로서의 공공 일자리 : 아키비스트형 작가

* 워킹그룹 토론 과정에서 이 의제의 성격이 점점 명확해졌다. 작가가 제공하는 역량은 구술 채록·생애사 인터뷰·지역 서사 집필이며, 이것은 기존 상주작가 사업과는 결이 다른 '집필 용역' 방식의 공공 일자리다. 상주작가가 독서 프로그램 진행·모임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 모델에서 작가는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다.

- 한 위원은 이를 '동네 생애사 인터뷰'라고 구체적으로 명명하며, 나주의 잠사공장 어르신들 인터뷰 경험을 실제 사례로 공유하였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영영 사라질 60년대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 호남비료공장 남자 노동자들과 잠사공장 여자 노동자들이 동네 빵집에서 만났던 기억, 그 빵집이 지금은 문방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작가의 기록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들에게도 이 작업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창작 소재 발굴의 과정이 될 수 있다.
- 또 한 위원은 과거 기업 사보 연재에서 진도의 홍주 장인 할머니, 강경의 40년 젓갈 상인, 보성의 찻잎 덖기 명인 등을 취재하며 지역 생활사를 기록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런 작업이 작가에게도 의미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고유한 이야기 자산을 남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정책적 지향

* 의제 6의 정책적 지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창작 지속을 위한 생계 보완: 창작 역량이 있음에도 생계 부담으로 이탈하는 작가들이 창작 활동의 연장선에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창작 지원금의 확대가 아닌, 작가의 역량이 사회에서 활용되는 구조적 경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작가 역량의 사회적 활용: 작가가 보유한 집필·구술채록·스토리텔링 역량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유한 공공 자산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작가를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 기여 주체로 재정위한다.
- 지역 서사 아카이빙과의 연계: 작가의 집필 활동을 통해 지역의 구술 기억·생애사·지역 문화사가 기록·보존된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라져가는 지역 서사를 미래 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공공 문화 자산 형성의 의미를 가진다.

3. 주요 추진 방향

* 의제 6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하나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타 부처·기관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이다.

가. 지역 기반 생활사·서사 기록 프로젝트 : 집필 용역형 공공 일자리

* 핵심 추진 방향은 작가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지역 생활사·문화사·구술 서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집필 프로젝트를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다. 기록 대상은 지역에 살아온 어르신들의 생애사, 사라져가는 지역 산업 종사자들의 구술 기억,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 자원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설정한다. 결과물은 이야기집, 지역 서사 아카이브 등의 형태로 생산·배포한다.

* 수요처 연계와 관련하여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는 밀착성이 높지만 폐쇄성과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문화원 연계가 유력하게 부상하였다. 문화원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존재하고, 지역 문화사와 향토 자원에 대한 축적된 기반을 갖고 있으며, 기존 발간·아카이빙 사업과의 연계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기초문화재단 연계도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성이 담보되고, 지역 밀착 사업을 기획하는 역량이 있으며, 예술위원회와의 매칭 구조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

* 작가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거주 작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연고지(출생지·생활권) 작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진정성 있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 연고를 가진 작가라는 것이 그 근거다.

나. 기존 타 부처·기관 사업과의 연계형 공공 일자리

* 두 번째 방향은 예술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만들기보다, 이미 유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타 부처·기관 사업에 작가를 파견·연계하는 방식이다. 귀농귀촌 플랫폼, 행안부 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도시 사업,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등이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 이 방향은 기존 사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예산 구조를 최소화하면서 작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 부처·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작가의 역할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작가가 단순 용역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지역 이해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술위원회가 작가 매칭과 활동비 지원을 담당하고, 수행 기관(지역문화재단·문화원 등)이 프로젝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워킹그룹에서는 이 외에도 섬 지역을 운항하는 병원선에 예술가를 동승시켜 의료 서비스와 문화 향유를 함께 제공하는 병원선 문학 프로젝트, 지역 공간을 다양한 예술가들이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공유 작업실 연계 모델, 군인·병영 등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학 파견 등의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4. 의제 1·2와의 관계 정립

* 의제 6은 의제 1(창작 전주기 지원)과 의제 2(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와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세 의제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논의 과정의 주요 과제였다.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 의제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제 1은 창작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기획-창작-발간-유통-확장의 흐름 안에서 작가와 생태계 주체들을 지원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의제 2는 문학 커뮤니케이터·문학 학예사 등 새로운 전문 직군을 제도화하거나, 작가-서점 자매결연 등 창작 주업을 유지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서브잡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있다. 의제 6은 이 두 방향을 보완하는 세 번째 축으로, 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작가의 집필·구술 역량이 공공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생계 보완형 공공 일자리 모델이다.

* 이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 6이 작가를 창작 활동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워킹그룹 토론에서 한 위원은 집필 용역이 창작 활동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활동이 작가에게 강제적인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창작 소재 축적의 과정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의제 6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수요처의 공공성 담보 문제: 주민자치위원회 연계 방안은 전국성과 밀착성이 강점이지만,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관계 충돌 위험이 있다. 워킹그룹은 공공성이 보다 담보되는 지역문화원이나 기초문화재단을 수요처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수렴하였다.
- 집필 용역과 창작 활동 간의 경계: 작가가 지역 이야기를 기록하는 집필 용역 작업이 창작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작업이 작가에게 의미 있으려면 단순 용역 의뢰가 아니라, 작가의 자율성이 보장된 구술·기록 프로젝트로 설계되어야 한다.
- 작가의 참여 동기와 설계: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작가가 자신의 동네와 지역 이야기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거주지 우선·연고지 가점 방식의 선발 구조가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 의제 2 서브잡 구조와의 중복: 의제 2에서 논의된 작가 서브잡 모델(작가-서점 자매결연, 격오지 파견 등)과 의제 6의 집필 용역형 공공 일자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의제 모두 창작을 지속하면서 생계를 보완하는 구조이지만, 의제 2가 문학 활동 연장선의 서브잡이라면, 의제 6은 비예술 공공 프로젝트에서 집필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리가 이루어졌다.

6.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6은 문학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작가 보호'에서 '작가 역량의 사회적 활용'으로 전환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제 2와 함께 이 연구의 핵심 방향 중 하나다. 이 의제가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중견·중장년 작가의 창작 지속 가능성 제고: 생계 부담으로 창작을 중단하는 작가들이 집필 역량을 활용한 공공 일자리를 통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 서사 아카이빙: 사라져가는 지역 생활사·구술 기억·지역 문화사가 작가의 기록으로 보존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문화 자산이 된다.
- 작가의 창작 소재 풍부화: 지역 생활 현장에서의 인터뷰와 관찰 경험이 창작의 새로운 소재가 되어, 경험 고갈로 인한 창작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지역 브랜딩과 공동체 정체성 강화: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공유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지역 브랜딩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3-7] 의제6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중견 작가의 창작 이탈 원인 = 역량 소진이 아닌 생계 기반 상실 - 창작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해결 불가 - 작가의 집필·구술채록 역량을 공공에서 활용할 경로 부재 - 지역 생활사·구술 기억의 소멸 : 아키비스트형 기록 필요
정책 방향	- 창작 역량의 사회적 활용을 통한 생계 보완형 공공 일자리 설계 - 비예술 공공 프로젝트(지역 서사 기록)와 예술 활동(창작)의 결합 - 작가 거주지·연고지 기반의 지역 밀착 프로젝트
주요 추진 방향	① 지역 생활사·서사 기록 프로젝트 (집필 용역형 공공 일자리) - 지역문화원·기초문화재단 연계, 거주지·연고지 작가 우선 선발 - 구술 채록·생애사 인터뷰·이야기집 제작 ② 기존 타 부처·기관 사업 연계형 - 귀농귀촌 플랫폼, 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과 연계 - 예술위 작가 매칭·활동비 지원 + 수행기관 운영 역할 분담
주요 쟁점	- 수요처 공공성 담보 : 주민자치위원회 폐쇄성·이해충돌 위험 → 지역문화원·기초문화재단으로의 수요처 전환이 현실적 대안 - 집필 용역과 창작 활동 간 경계 설정 : 작가 자율성 보장 설계 필요 - 의제 2 서브잡 구조와의 중복 : 역할 분담 명확화 - 지역 내 기존 문인협회·단체와의 갈등 가능성
기대 효과	- 중견 작가 창작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경력 단절 방지 - 사라져가는 지역 생활사·구술 기억의 공공 아카이빙 - 새로운 경험 축적을 통한 작가 창작 소재 풍부화 - 지역 브랜딩 자원 형성 및 지역 공동체 정체성 강화

* 의제 6은 문학 정책이 작가 개인의 창작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작가의 역량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그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 의제의 실효성은 수요처와의 협력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작가의 자율성과 창작 활동과의 연결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달려 있다.

제7절 문학 정책/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

1. 의제 설정 배경 및 문제 인식

가. 의제 7의 위치 : 나머지 여섯 의제를 떠받치는 토대

* 의제 7은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설정되지 않았던 항목으로, 2차 연도 워킹그룹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의제다. 의제 1부터 6까지의 세부 과제들이 아무리 잘 설계되더라도,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을 조율하며 정책 성과를 누적·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없으면 개별 사업이 파편화되거나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워킹그룹은 이 의제를 나머지 여섯 의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로 위치시켰다.

* 발제를 맡은 위원은 현재 문학 정책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문학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간이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점검·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를 지적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상호 간 협력·조정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제7] 문학 정책/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정책 일관성·성과 확대) : 발제

> 문학진흥법이 있음에도 2023년 발표된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실행 책임 기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예술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관 간 협력·조정 구조가 부재합니다. 의제 1~6의 과제들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차 세미나)

나.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부재와 '법정기구 없는 진흥계획'의 역설

*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2기 위원회 운영 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2023년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점검하고 실행을 감독할 상설 기구가 없어 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 2025년 11월 문체부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1년 임기의 자문기구로서 법정기구로서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워킹그룹에서 공유되었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 한 위원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과거 운영 과정에서 노출한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주요 문학 단체의 배분 논리에 따라 구성되어 단체 이해관계가 정책보다 우선시되는 구조, 자문기구에 그쳐 의결 권한이 없어 실행력이 없는 구조, 명망가 위주 구성으로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구조 등이 반복적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 주체의 다양화(작가·출판·도서관·서점 등 생태계 전체 참여), 실질적 의결 권한 부여, 역할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설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기관 간 역할 중복과 정책 연계의 공백

* 현재 문학 관련 공공기관들(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독서문화진흥원 등)은 각자의 법적 근거와 예산 구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 결과 유사한 사업이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거나, 어느 기관도 맡지 않는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된다. 국가 차원의 문학 통계와 연구 의제 발굴 기능도 특정 기관에 귀속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한 위원은 이 문제의 핵심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이 공유되지 않은 채 각 기관이 자체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거버넌스 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학 생태계 전체에서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공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정책적 지향

* 의제 7의 정책적 지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컨트롤타워 기능의 복원: 문학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문학정책 협력·조정 기구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킨다.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기관 간 역할 조정, 정책 방향 설정, 기본계획 점검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만든다.
-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 사이클 구축: 문학 정책의 방향은 현장의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정책화하며, 다음 연구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제도화한다.
- 인프라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재원 기반 마련: 전국 문학관 협력망, 문학 정보 플랫폼, AI 시대의 창작자 보상 재원 등 문학 생태계의 물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3. 주요 추진 방향

* 의제 7에서는 다섯 가지 세부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가. 문학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복원

* 문체부 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이 네트워크의 상위에서 기본계획 점검과 정책 방향 논의를 담당하는 법정 기구로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워킹그룹은 복원된 위원회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설계 원칙을 논의하였다. 첫째,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작가 단체 중심의 n분의 1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출판·도서관·서점·플랫폼·독자 등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구 자체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기구가 만들어진 후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학 정책에서 현재 비어 있는 기능들을 먼저 정의하고 그것을 담당할 기구를 설계하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의결 기능과 집행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이 기구는 문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예술위원회가 행정 지원 역할을 맡고 그 필요성을 정부에 제언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워킹그룹 방식을 제도화하여,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사이클을 구축하는 역할도 이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나. 전국 문학관 협력망 구축

*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제주 권역에 거점형 지역문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이는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지만, 지역 문학관들이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 동의한 근거이기도 한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한 위원은 국립한국문학관이 개별 문학관들과 직접 연결되는 방식보다, 권역별 거점문학관을 중간 매개로 삼아 3단계 체계(국립문학관 → 거점문학관 → 개별문학관)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거점문학관이 해당 권역 내 문학관들의 협력과 아카이빙을 조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기능을 지역 단위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다.

* 워킹그룹은 협력망 구축 시 전국문학관협의회를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문학관협의회가 이권단체화되어 있다는 현장 진단에 따라, 공공 문학관 중심의 협력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민간 문학관은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2차 세미나에서도 거점형 지역문학관 제도화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지만 정책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립한국문학관 주도의 연구조사와 제도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한국문학 정보 플랫폼 '사이' 구축

* 작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소멸 원문 서비스, 공개 가능한 연구논문 링크, 공모전·신춘문예 정보, 작가 강연·파견 정보 등을 통합하는 문학 정보 플랫폼 구축이 세 번째 방향이다. 현재 문학 관련 정보들은 예술위원회 문장 웹진, 국립도서관, 네이버 등 여러 채널에 산재되어 있어, 연구자·편집자·독자·정책 담당자 누구에게도 충분히 기능하는 통합 정보 창구가 없는 상태다.

* 다만 워킹그룹은 이 플랫폼 구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 위원은 '공공이 만드는 플랫폼은 사실상 다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활동하는 구조가 담보되지 않는 플랫폼은 유지 비용만 소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 위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 포털보다, 국립한국문학관의 고유 미션 범위 안에서 비어있는 기능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 작가·작품 공인 DB: 돌아가신 작가들을 포함하여 국가 수준의 공인된 작가 정보를 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연도별 목표 작가 수를 확정하고, 갱신 계획과 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담보한다.
- 문예지·비평 아카이빙: 각 문예지의 게재 작품과 비평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빙하여, 연구자들이 문학 비평과 작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구축한다. 문예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조건으로 아카이빙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 작가–수요기관 매칭 정보 서비스: 강연·파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원하는 작가와, 작가를 초청하려는 도서관·학교·기관을 연결하는 공공 에이전시 기능을 플랫폼 안에 탑재한다. 기존에 중단된 예술인 경력정보 플랫폼의 문학 특화 버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

* 2차 세미나에서 한 위원은 플랫폼 사이 구상을 처음 발제했을 때보다 훨씬 신중한 입장으로 재검토하면서, 과거의 실패 경험을 인정하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I 시대에는 포털 방식보다 위키피디아형 참여 아카이빙, AI 텍스트 데이터 저작권 등록과 연계한 작가 정보 DB 등의 새로운 접근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라. 문학정책 평가·관리 지표 체계 도입

* 현행 문학 지원 사업들은 각 사업별로 개별 성과 지표를 갖고 있으나, 문학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측정하는 통합적 지표 체계가 없다. 이로 인해 개별 사업의 성과는 보고되지만 문학 정책이 문학 생태계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 워킹그룹은 사업별 정량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두 가지 방향을 논의하였다.

- 첫째, 정성평가의 제도화다. 1차 연도 인터뷰에서 작가·출판인·독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수혜 경험의 질적 변화를 담아내는 정성평가였다. 문학계 의견을 반영한 고유한 평가 방식을 설계하고, 이를 연구 용역과 학계 자문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문학 정책 연구 의제의 체계적 발굴이다. 한 위원은 문학상 생태계, 문예지 지원 10년 성과, 지역 문학 실태 등 문학 정책에 필수적인 연구 주제들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연구들을 누가 발주하고 관리하며 정책에 반영하는지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연구 의제를 연례적으로 발굴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마. 문학진흥 포럼 및 문학행정협의체 운영

* 다섯 번째 방향은 문학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기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다. 연 2회 이상의 공개 포럼과 창작자·출판사·도서관·서점·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 운영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 워킹그룹 토론에서 한 위원은 과거 민간 주도로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출판사·도서관 간의 전자책 관외 대출 소송 등으로 좌초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해 충돌이 내재된 민간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또는 예술위원회가 행정적 중심을 맡고, 민간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혼합 구조가 더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협의체가 표준 계약서, 공공 대출 보상금, AI 저작권 등 생태계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제들을 다루는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바. AI·플랫폼 기반 문학 재원 확충 방안

* 의제 7의 마지막 방향은 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창작자의 저작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이다. 크게 세 가지 경로가 논의되었다.

- 첫째, AI·스마트폰 관련 사적복제보상금 확대다. 현재 복사기·스캐너 등 저작권 침해가 예정된 기기 판매 시 부과하는 사적복제보상금이 스마트폰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마트폰 판매 시 저작권 침해 보상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다. 다만 삼성·LG 등 기기 제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둘째, 수업목적 보상금의 초중고 확대다. 현재 대학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가 초중고에는 면제되어 있다. 1980년대 지식 강국 육성 목적으로 설계된 이 면제 조항을 현재 문화 강국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보상 재원이 의미 있게 늘어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 셋째, 온라인 서적 유통 플랫폼 기여금 신설이다. 중고서적 거래 플랫폼이 작가·출판사에 아무런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대형 온라인 서점 및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문학 또는 출판 진흥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영화진흥기금의 영화 티켓 부과 모델을 문학 영역에 적용하는 발상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 방안들은 문학 단체와 문체부가 이미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로, 이 연구에서 정책 제언의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이 검토되었다.

4.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의제 7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기구 vs.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기구를 먼저 만들고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워킹그룹은 문학 정책에서 지금 비어 있는 기능들을 먼저 목록화하고, 그것을 담당할 주체와 구조를 설계하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복원의 현실적 어려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문체부의 의지와 자원 배분에 달려 있다. 예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행정 지원과 정책 제언을 통해 문체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공공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 '공공이 만드는 플랫폼은 다 망한다'는 경험적 회의론이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 포털보다 특화 기능에 집중하고, 자발적 참여 유인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하였다.
- 전국문학관협의회 배제와 공공 문학관 중심 구조: 문학관협의회가 이권단체화되어 있다는 진단에 따라, 공공 문학관 중심의 협력 체계를 우선 구성하고 협의회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갈등 관리: 창작자·출판사·도서관·서점·플랫폼은 동일한 생태계 안에서도 표준 계약, 공공 대출 보상, AI 저작권 등 핵심 사안들에서 이해가 충돌한다. 이를 공개 공론장에서 다루려면 중립적 중재 기능과 명확한 운영 원칙이 설계 단계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의제 7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문학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 정권 교체와 담당자 변경에 관계없이 문학진흥기본계획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실행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공백 해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위원회·국립한국문학관·번역원·출진원 등 기관 간 역할이 조율되고, 누구도 담당하지 않던 공백 기능이 특정 기관에 배정된다.
- 연구 기반 정책 사이클 구동: 문학 정책 연구 의제가 연례적으로 발굴·수행·발표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사업 설계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
- 문학 재원 기반의 구조적 확충: AI·플랫폼 기반 창작자 보상 재원이 제도화됨으로써 공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문학 생태계의 자생적 재원 기반이 마련된다.

[표 3-8] 의제7 주요 논의 사항 (종합)

구분	주요 내용
문제 인식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사실상 기능 정지. '법정기구 없는 진흥계획'의 역설 -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발표(2023) 이후 실행 책임 기관 부재 - 예술위·국립문학관·번역원 등 기관 간 협력·조정 구조 없음 - 문학 정책 필수 연구(문학상 생태계, 문예지 성과 등)의 만성적 공백 - AI·플랫폼 시대 창작자 보상 재원의 구조적 부족
정책 방향	- 컨트롤타워 기능 복원. 기구보다 해야 할 일 먼저 정의 - 연구 의제 발굴 → 정책화 → 성과 평가 사이클 제도화 - 특화 기능 중심의 문학 정보 인프라 구축(종합 포털 탈피) - 이해관계자 상생 협의체 + 중립적 중재 구조 설계
주요 추진 방향	① 문학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복원 - 구성 다양화, 실질 의결 권한, 생태계 전체 참여 ② 전국 문학관 협력망 구축 (국립→거점→개별, 3단계 체계) ③ 한국문학 정보 플랫폼 '사이' : 작가 DB·문예지 아카이빙·매칭 서비스 특화 ④ 문학정책 평가·관리 지표 체계 도입 (정성평가 제도화, 연구 의제 발굴) ⑤ 문학진흥 포럼 및 문학행정협의체 운영 ⑥ AI·플랫폼 기반 문학 재원 확충 (사적복제보상금, 수업목적 보상금, 플랫폼 기여금)
주요 쟁점	- 기구 vs.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 역할 먼저, 기구 나중 - 위원회 복원의 현실적 어려움 : 문체부 의지와 자원 배분 필요 - 공공 플랫폼 지속 가능성 : 종합 포털보다 특화 기능에 집중 - 전국문학관협의회 이권단체화 : 공공 문학관 중심 우선 구성 - 이해관계자 협의체 갈등 관리 : 중립적 중재 기능 설계 필요
기대 효과	- 문학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확보 -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공백 해소 - 연구 기반 정책 사이클 구동 및 정성평가 제도화 - 전국 문학관의 체계적 협력망 형성 - AI·플랫폼 시대 창작자 보상 재원의 구조적 확충

▶ 의제 7의 구조적 위치 : 모든 의제의 전제 조건

- 의제 7이 다루는 거버넌스 구조는 의제 1부터 6까지의 세부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창작 전주기 지원 체계(의제 1)와 문학 직업 생태계 재구축(의제 2)은 기관 간 역할 조정 없이는 중복과 공백 사이에서 표류한다. 지역 문학 균형발전(의제 3)은 전국 문학관 협력망이 없이는 구조화되기 어렵다. 독서·소비 기반 확대(의제 4)와 전달 체계 혁신(의제 5)은 정책 연구와 성과 데이터 없이는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공공 일자리 모델(의제 6)은 타 부처와의 협력 없이는 사업 연계가 불가능하다.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7개 의제는 상호 독립적인 정책 묶음이 아니라, 의제 7의 거버넌스 기반 위에서 의제 1~6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연계 구조다. 의제 7을 통해 컨트롤타워가 작동하고, 연구 사이클이 돌아가며,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의제의 정책 과제들이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04

종합 시사점 및 연구 함의



제1절 의제간 공통 문제의식

7개 의제는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세미나와 토론 과정을 통해 일부 문제의식이 여러 의제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네 가지 공통 흐름으로 정리한다.

1. '창작자 보호'에서 '문학 생태계 전체'로 : 지원 대상에 관한 문제 제기

* 워킹그룹 토론에서는 기존 문학 지원 정책이 작가 개인과 발간 단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 결과 출판사·기획사·에이전시·서점 등 문학 생태계를 실제로 구성하는 다른 주체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한 위원은 '창작 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생태계 안의 다른 주체들이 취약해진다'고 지적하였으며, 다른 위원 역시 생태계 전체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지원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세미나 논의를 돌아보면, 창작 전주기 지원(의제 1), 문학 직업 생태계(의제 2), 매개·전달체계(의제 5), 독서·소비 기반(의제 4), 비예술 결합형 생계 안전망(의제 6)이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응답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의제 사이의 관계와 역할 분담은 세미나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 보고서에서의 연결도 초안적 수준임을 밝혀둔다.

2. 단절된 연결고리 : 창작·전달·향유·소비 사이의 구조적 공백

* 워킹그룹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문학 생태계 안에서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제 4의 발제자는 '왜 북 페스티벌에는 열광하는데 독서율은 계속 낮아지는가'라는 역설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의제 5의 발제자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와도 독자에게 닿지 않으면 생태계 선순환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 의제 2 논의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경제 커뮤니케이터와 같이 전문 영역과 대중 사이를 연결하는 인력이 문학 분야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단절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해소할 것인가는 세미나 내내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3. 지역과 비주류의 이중 소외 : 서사의 소멸이라는 문제의식

* 의제 3의 발제자는 '지역 소멸은 서사의 소멸'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지역 문학의 위기가 단순한 문화 정책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언어가 사라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점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소멸 예정 서점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공유되었다.

* 의제 6 논의 과정에서는 지역 생활사 기록이라는 집필 활동이 창작자의 생계 보완과 지역 서사 보존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두 문제가 하나의 사업 설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세미나에서 공감을 얻었으나, 수요처 확보와 공공성 담보를 둘러싼 쟁점이 함께 제기되었다.

4. 구조 없는 정책 : 거버넌스 부재에 관한 반복적 문제 제기

* 의제 7 발제에서, 문학진흥법과 문학진흥기본계획이 존재함에도 이를 실행하고 점검하는 상설 기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다른 위원 역시 '기관 간 역할 조율과 연구 의제 발굴을 담당하는 구조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복원 시 과거의 실패(명망가 중심 구성, 단체 배분 논리, 실질 의결 권한 부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설계 조건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 거버넌스 부재 문제는 의제 7에서 직접 다루어지는 한편, 다른 의제들의 실현 가능성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워킹그룹 내에서 공유되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 문제의식과 방향이 논의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2절 정책 방향의 시사점

7개 의제는 각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한다.

1. 지원 대상과 방식에 관한 논의 방향

* 세미나 논의를 통해 확인된 시사점 중 하나는, 기존 정책 구조가 작가 개인과 발간 단계에 집중해 온 반면, 문학 생태계의 실제 작동 방식은 그보다 훨씬 넓은 주체들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그룹은 지원 대상·방식·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논의하였다.

[표 4-1] 의제7 주요 논의 사항 (종합)

논의 축	현행 구조에서 제기된 문제	워킹그룹이 논의한 방향
지원 대상	작가 개인 중심 지원 발간 행위자로서의 작가에 집중	출판사·기획사·서점·매개자 등 생태계 주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지원 방식	단년도·발간 중심 성과물(결과물) 중심 평가	기획·창작·유통·확장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지원 구조, 다년제 접근에 대한 필요성 논의
정책 범위	창작·발간 단계 중심 수도권·주류 장르 편중	향유·소비 단계 포함, 지역·비주류 서사 발굴로의 범위 확장 논의
거버넌스	기관별 독립 운영 사업별 개별 지표 관리	기관 간 협력 구조 마련, 연구 기반 정책 사이클 필요성 제기

* 위 표에 제시된 방향은 세미나 논의에서 '이러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된 사항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제별로 입장이 달랐고, 일부 사항은 추가적인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둔다.

2. 의제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

* 세미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제가 서로 연결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의제 2(문학 커뮤니케이터)와 의제 4(북클럽 리더)는 역할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고, 의제 2와 의제 6은 서브잡 구조와 공공 일자리 개념의 경계 설정이 논의되었다. 또한 의제 3(지역 균형)에서 다루는 파견·레지던스 방향은 의제 2·6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세부 과제 단위에서의 재배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 이러한 연관성은 7개 의제를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의제 7(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과도 맞닿는다. 다만 의제 간 연계 구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으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표 4-2] 의제 간 주요 연관 관계

연관 의제	연결 지점	세미나에서 제기된 쟁점
의제 1 & 의제 2·6	창작 지원 구조 vs 생계 보완 모델	창작 지원과 생계 안전망의 역할 구분, 서브잡과 공공 일자리 개념 경계
의제 2 & 의제 4	문학 커뮤니케이터 vs 북클럽 리더·콘텐츠 활동가	역할 중복 우려, 제도화 방식 차이, 의무 배치 vs. 자발적 활동 지원
의제 3 & 의제 2·6	지역 파견·레지던스 vs 서브잡·공공 일자리	지역 내부 인력 발굴 vs. 외부 파견, 세부 과제 단위 재배치 필요성 논의
의제 5 & 의제 2·4	기술 기반 전달 vs 인적 기반 매개	플랫폼·미디어 방식과 인적 매개의 상호 보완 관계, R&D 과제 전환 논의
의제 7 & 의제 1~6 전체	거버넌스 기반 vs 개별 사업 추진	기관 간 협력 없이 추진 시 중복·공백 발생 가능성, 컨트롤타워 필요성

3. 공공 역할의 범위에 관한 논의

* 워킹그룹 논의에서는 문학 지원에서 공공이 어디까지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쟁점이 여러 의제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한 위원은 '공공이 만드는 플랫폼은 사실상 다 망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공 직접 운영의 한계를 제기하였고, 또 예술위원회가 향유 사업을 어디까지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시장이 다루기 어려운 비주류·지역 서사 영역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 논의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방향 중 하나는,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고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역할 경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제별로 입장이 달랐으며, 이 연구에서 일률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제3절 의제별 정책 과제의 추진 경로

7개 의제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제도 설계의 난이도, 타 기관·부처와의 협력 필요성, 법령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추진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세미나 논의에서 드러난 실현 가능성과 준비 조건을 참고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워킹그룹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경로임을 밝혀둔다.

[표 4-3] 의제별 정책 과제 추진 경로 (참고안)

구분	주요 과제	특성 및 고려 사항
단기 (기존 사업 구조 활용 가능)	- 문학상주작가 사업 공간 유형 다변화 (의제 3) - 작가-서점 자매결연 파일럿 (의제 2·6) - 문해력 프로그램 독서국가추진위원회 연계 (의제 3·4) - 지역 생활사 기록 프로젝트 파일럿 (의제 6) - 문학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원 시범사업 (의제 5)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복원 관련 논의 착수 (의제 7)	- 기존 사업 구조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파일럿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과제. 새로운 법령 없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 - 단, 파일럿 결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 중·장기 과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중기 (제도 설계·실증 필요)	- 문학 커뮤니케이터 자격 체계 설계·시범 배치 (의제 2) - 생활권 문학 북클럽 지원 시범사업 (의제 4) - 문학 소비 마중물 제도 설계·실험 (의제 4) - 전국 문학관 협력망 연구조사 (의제 7) - 문학 특화 플랫폼 R&D 과제 제안 (의제 5) - 문학정책 평가 지표 체계 개발 연구 (의제 7)	- 자격 체계 설계, 시범사업 성과 검증, 연구·설계 완료 후 추진 가능한 과제. - 기관 간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 - 세미나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포함됨.
장기 (법·제도 개편 또는 부처 간 협력 필요)	- 문학 전주기 다년제 지원 구조 도입 (의제 1) - 문학 학예사·커뮤니케이터 통합 자격 법제화 (의제 2)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기능·구성 법령 정비 (의제 7) - AI·플랫폼 기반 창작자 보상 재원 입법 논의 (의제 7) - 수업목적 보상금 초중고 확대 입법 논의 (의제 7) - 권역별 문학 특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의제 3)	- 법령 개정, 타 부처 협력,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 - 이 보고서에서는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은 별도의 정책 연구로 발전시켜야 함.

* 위 구분에서 단기 과제로 분류한 항목에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위원회 복원이 단기에 완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미나 논의에서 다수의 위원이 위원회 부재로 인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다른 과제들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제4절 연구의 의의

* 이 연구는 문학 생태계를 창작에서 향유·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살펴보고, 작가에서 독자까지 다양한 생태계 주체의 문제의식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문학 정책 연구가 특정 단계나 특정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 연구는 여러 층위의 문제를 하나의 보고서 안에서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워킹그룹 방식의 운영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관점이 직접 만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학평론가·작가·정책 담당자가 같은 자리에서 의제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제된 이론보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문제들—자격 제도화의 딜레마, 공공 플랫폼의 실패 경험, 지역 내 이해관계 충돌—이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을 보고서에 담으려 한 것이 이 연구의 방향이었다.

* 이 보고서는 확정된 사업 계획이 아니라 (안)으로서, 정책 논의의 출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더 넓은 이해관계자들(문학 단체, 출판계, 도서관, 서점, 지자체)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이 보완·발전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사 : 문학

- 발 행 인 : 이범헌
- 발 행 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소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 전 화 : 061-900-2100, 2200
- 팩 스 : 061-900-2362
- 홈 페 이 지 : www.arko.or.kr
- 인 쇄 일 : 2026.06.30.
- 발 행 일 : 2026.06.30.
- 인 쇄 인 : 네오블루


한국문화예술위원회